

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국회사무처

2018년9월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정치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대표발언 1
1. 정치에 관한 질문 5

(10시0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대표발언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와 민주평화당의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30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 원씩 뛰는 걸 보고 '우리 평생 집을 못사겠네요' 이렇게 말하며 펄펄 울더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있는 집 대학생들까지 돈을 빌려서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느냐고 그들은 절규합니다. 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20년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IMF 당시에—2000년이지요—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묶어 온 분양가상한제를 풀었습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대출 규제, 세제 강화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핵심이 빠진 뻔한 대중요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 내는 것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2004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6년에는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라는 이른바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

했습니다.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했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항목으로 줄여서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고 2014년에 박근혜정부는 남아 있던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해 버렸습니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쭉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현 정부가 5년 동안 50조 원을 들여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기했습니다.

작년 9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 경기도에서는 90%가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모든 국민이 좌절하고 있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2년에 한 번 연장이 전부입니다. 상가는 현재 5년만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 달라고 하는데 아직 국회는 그것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늘린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려면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100년 전에 차지법(借地法)과 차가법(借家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세 든 사람,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하는 법입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100년이 넘는 우동집, 선물집, 과자가게 등이 즐비합니다. 2만 개가 넘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 그 핵심은 차가인 동맹입니다. 일본인 건물주에 대항해서 조선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차지차가법을 적용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본국에서는 실시하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거부했던 차지차가법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습니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년가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축발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 농가에게 너도나도 흑염소를 키우라고 권유한 결과 흑염소값이 폭락하자 정부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농민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는 왜 국회에도 못 들어가고 국회 정문 밖에서 구호를 외쳐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본해법이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 지지표만큼 입법자를 국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쌀값 문제, 농업 문제, 농민 문제, 농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숙원인 쌀값 목표 24만 5000원을 관철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농사짓는 분은 딱 두 분입니다. 저기 소 키우시는 김현권 의원님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김제·부안에서 농사지으시는 김종희 의원님 두 분입니다.

농업 인구는 300만 명, 국민의 6%입니다. 농민 대표는 300분의 2, 1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갖 사회적 갈등과 요구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각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0년 전 6월 항쟁 때 온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 뽑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직선제로 바꿨더니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 주권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70년 된 낡은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지났으면 낡고 바꿔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의 평균 득표율은 48%입니다. 유권자의 48%는 자신들이 찍은 대표를 입법자로 국회에 보냈지만 나머지 52%, 2등을 찍거나 3등을 찍거나 이분들은 모두

사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1인 1표의 주권은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올 연말이 넘어가면 이것 역시 물 건너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의 원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들자면서 선거제도 개혁 대열의 맨 앞장에 서 계십니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에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개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습니다.

다음 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다섯 달 만에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대한 전환입니다.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입니다.

내일은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엽니다. 이 역시 분단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거점과 가교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가로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난기류를 정리하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거래를 중개해야 합니다. 불신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쪽이 남쪽

을 믿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복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경제부국의 꿈에 있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파기해 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년-루가법이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와 독립 국가의 핵 확산 위협이 증가했을 때 미국은 국방비를 들여서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때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년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리처드 루가 의원이 공동으로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달라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년-루가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갈 수 있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와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독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콜 수상이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을 교체했을 때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달라졌어도 사민당의 브란트를 자신의 멘토로 삼고 동방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독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에도 초당적 협력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일했던 2005년 12월, 여야는 만장일치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에 저는 남북관계 기본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요구를 절충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양보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대북 특사 파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조약의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남북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중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서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젖혀야 합니다. 평화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파리의 OECD 사무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30년 대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진다는 암울한 보고서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과 투자가 정체하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친다는 끔찍한 보고서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은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발달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산업화 초기에는 고도성장을 하다가도 중성장 그리고 성숙한 단계에 가서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모형을 예외 없이 걸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의 성숙한 시장경제 단계에서 다시 고도성장으로 뛰어오르는 예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화경제에 있습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광물 자원을 결합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해서 2030

년대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추월하고 마침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는 가슴 벅찬 전망이었습니다.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북한은 독자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의 나라가 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분단 지속과 갈등 그리고 정체와 후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공존과 번영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의 길을 갈 것이냐의 두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께서 초청한 5당 대표 회동에서 저는 통이 큰 정치를 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소한 당리당락을 초월해서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시24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만든 촛불 정권입니다. 이 점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 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가 사유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 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거시경제지표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와 직결된 설비투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비자금 상납했던 많은 재벌들의 사익 추구가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총리님, 스페인 속담에 ‘불법의 쾌락 후에 적법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연 이 고통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영선 의원 굵은 것 도려내는 수술 후에 통

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사 설명 듣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여기에 따른 고통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고통의 설명보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조금 전에 거시경제만 보면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경제부총리의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주거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보면 ‘아하’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생지수가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것을 가까스로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찾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생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현안인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지요.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국 평균의 두 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름 붓

는 격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가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인하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영선 의원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지요.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실기하게 했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아주 근원지이지요. 이것은 정책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관료로부터 ‘시중 유동자금 과잉, 600조원이 참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당시의 금리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빚내서 집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습시다마는 아직도 그 국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새기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든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든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역전했지요.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리,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결국 실패해서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연체율 등 이런 것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박영선 의원 자, 그러면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해결하려면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누가 정책 컨트롤타워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주무는 국토부이지만 컨트롤 타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부총리입니다.

○박영선 의원 앞으로 허점이 없도록 정말 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의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무부 상법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오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일부 주주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이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 전체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하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들로부터 독립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법무부 입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집중투표제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관련된 상법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부럽다고 했으니까 일본이 잘 나가는 주요 핵심, 이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사개특위 구성된 지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 호통만 치고 있어요.

법무부의 주요 임무인 사법 개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법무부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요 국회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문화도 완료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문화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법무부는 역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치 경력이 풍부하시고 또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듣는 장관님이신데 이 국민 여론을 국무회의에 가서 잘 전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무래도 국무회의라는 게…… 국회도 보면 상임위 때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회의 때는 그렇게 못 하듯이 국무회의

에 최종적 안건이 올라올 때쯤 되면 사실은 그런 토론 과정이 다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활발한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대통령님이나 혹은 사회를 보시는 총리께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활발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님께 어떻게 잘 전달을 하고 계신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무래도 저희들로서는 바깥에서 여러 보고도 받고 하니까 의견을 합니다마는 또 대통령께서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여러 기구나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여론을 장관님들께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더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님과 오찬 하시면서 국정을 논의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민들이 전하는 쓴소리, 비판 이런 것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표현을 완화하거나…… 제원래 방식이 그렇게 막 자극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그런 편이 못 돼서요 제 방식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저는 쓴소리를 좀 직설적으로 해서 가끔 미움도 받습니다마는 총리님의 쓴소리는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니 보육’이라는 말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엄마들의 호소에 눈물짓는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더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료들이 에스맨들로만 채워져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대통령께 ‘노’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몇 가지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저는 총리께서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의 갈딱고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3만 불 시대에서 잃어버린 20년, 스페인도 3만 불에서 2만 불로 곤두박질치는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 불을 메가비전과 개혁과 혁신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4차 혁명 산업의 핵심인데 융합과 연결의 힘이 또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칸막이 없애고 융합의 힘을, 융합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리께서 잘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수소경제, 2차전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시재생도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미세먼지 없는 도시, 숲이 있는 도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런던의 2050년 목표는 도심 공원 50%입니다. 이런 것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독일은 90년대 통일 이후에 막대한 재정 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핵심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단단한 경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주택 문제만큼은 공개념을 도입해서 공통의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방 세 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호화주택입니다. 화장실 2개 지으면 건축비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수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규제 풀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강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이 와중에서 가진 자는 더 갖고 서민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독일처럼 여야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변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규제와 가격 통제를 통해서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 정부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 전환의 시도입니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중단하겠습니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습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지 않고 빨리 폐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 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진국들도 한때 성장 한계를 겪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입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경제에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반 기업 친 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 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망쳐 왔던 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업도 국민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성취 욕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를 그만두고 강력한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장이라는 민물은 모든 배를 띄웁니다. 성장 정책은 투자주도, 기술주도, 지식주도의 성장이 되어야 하고 그 선봉에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조의 존중이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라 공간을 튼튼히 지키는 금고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나랏돈은 펄펄 쓰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추세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언제 우리나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즉 세금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남용하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나 내야 합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서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 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는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 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서 주택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택, 특히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 10.9%를 더 인상한 것, 산업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현재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서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 이낙연 총리께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 지금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을 경질 요구하지 않으면 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이나 경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는 유엔 제재결의안의 위반입니다. 청와대가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여

론몰이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부리겠다는 오만과 무례의 극치입니다. 비서실장이 입법부 전체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야단을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당리당락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 개발에 나서면서 5~8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 랜드연구소, IAEA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게다가 판문점 선언의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를 국민에게 밝히지도 않은 채 국회에 기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북 간에 또 우리 남북 간에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실익을 올릴 수 있도록……

○김무성 의원 아니, 정상회담 이후에 핵무기를 계속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 정보 당국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판문점 선언에 소요되는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일단 앞으로 북측과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712억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반영해 왔던 것을 추가한 2986억이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소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북한을 도와주어서 평화가 온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이 알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기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소요에 대해서도 국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들어가십시오.

역사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사람이 그 흠탕물을 뒤집어써야 합니다. 한 시대가 실패의 업보를 쌓으면 다음 시대가 온갖 고생을 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은 헌법 정신의 위반이자 역사를 후퇴시킵니다. 현실이 진실입니다. 민생 성적표가 나쁘고 국정에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으면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김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관악구를 출신의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1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구약을 내쫓고 기뻐했

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금시초문입니다.

○오신환 의원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신환 의원 총리님께서서는 앞서 대통령께 제 방식대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데 그런 방식입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의원 최근에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월요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두 분이서 하셨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 옆에 배석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 또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인지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겠습니까라는 수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별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이 넘어섰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해진 그런 비서실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향간에 청와대 정부라고 비아냥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을 할 때도 그랬고 또한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했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광화문 정부청사,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도 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이 정부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환 의원 광화문 시대는 단순히 집무실을, 청와대를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만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오신환 의원 앞서 말씀하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들을 축소하고 총리께서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헌법이 부여한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고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신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했던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저도 알고 계시지요? 저도를 지금 개방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디지요?

○오신환 의원 대통령의 별장으로 거제에 있는 저도.

○국무총리 이낙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 가셨던, 예.

○오신환 의원 그것을 공약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신환 의원 대통령께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사추천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니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약속했던 것 가운데 속도가 더딘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청와대의 정부에 대한 패싱 이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늘 국정운영 과정에 청와대 비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최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말할 것 없이 장관과 총리께서 내각을 통할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이미 청와대로 다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큼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신환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보통 대중들은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언론 또한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지요. 심지어 내각책임제 국가들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한테도 그런 보도나 대중의 관심 때문에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할 일을 놓고 있거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신환 의원 총리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언론의 관심이 오히려 청와대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 세계적으로 언론이란 늘 계속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실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또는 좀 놀라운 것 이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환 의원 청와대에서 매 사안마다 저렇게 패널을 들고 나와서 언론에다 브리핑하는 것을 장관이 하고 총리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메르스는 내각이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요.

○오신환 의원 장관들을 패싱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청와대에서 청해부대 급파 지시를 할 때 장관을 패싱하고 합참의장에게 직접 이동 명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도 개헌 발표 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을 주도해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패싱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든 사안 사안마다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비서들이 앞장서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안보실장을 대미특사로 보낸 것도 내각의 패싱일 것인가? 특사는 원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나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 특사 자체를 안보실장이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에 외교부 직원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보실장이 가더라도 외교부와 함께 협의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미특사가 가기 전이나 후에 외교장관과 충분히 의견을 공유한 과정은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얼마 전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신환 의원 한번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그중에 365명이 이른바 캠퍼더 인사로 저희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1년으로 치면 하루에 1명씩 내리쬘은 사례입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 당시에 친박 인명사전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신환 의원 민주당은 공공기관장과 감사직에 있어서 19개월 동안 총 86명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고 친박 인명사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직의 경우는 불과 14개월 만에 86명보다 더 많은 131명의 낙하산 인사로 내리쬘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 달라서 이것은 낙하산 인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바른미래당에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오신환 의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가?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자리에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거나 업무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입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내부의 인사 비리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명한 정치인들에 대한 내각 인사, 그것도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의 상임위 활동들을 전문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철도공사로 임명된 오영식 사장의 경우는 3선 국회의원 동안 단 한 번도 철도와 연관 있는 국토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원들이 ‘코레일 사장님께서서는 철도 근방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철도를 많이 타고 다녔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말씀, 그 일화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신환 의원** 이미 언론에도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마사회, 도로교통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백서를 발간한 내용 안에는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친문 인사들을 거기에 임명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적인 보은·코드 인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캠프에서 코드인사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그런 인사들이 모든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의,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분이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가를 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고 있는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 가는 것은 청년들 취업·채용에 왜곡이 생기는 현상이 이것이 더 직접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은 저희들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공공기관장이 해야 될 역할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그 능력을 보장받고 그것이 인정될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좀 더……

○**오신환 의원** 물론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살폈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그 사례들로 보면 이것은 전문성과는 너무나 무관한 그런 인사로 일관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국민 일반이 좀 더 수궁하실 수 있게끔 검증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한 가지 화면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365명 중에 9명이 들어가 있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후에 낙선자가 무려 14명이나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감사로 가 있습니다. 낙선자 145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14명이 보은인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후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보나 또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보은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는 후보 경선 당시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는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신환 의원** 그리고 ‘인사 자체에 잘못이 있다’ 이게 총리께서 17대 국회의원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에 기고했던 글의 내용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음 화면이 바로 대통령께서 ‘시스템 인사, 엄격한 검증에 의한 인사추천실명제를 공약

했다. 그리고 보은·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책임총리·책임내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내각이 힘을 실어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들, 청와대가 개입하고 그것이 정부와 손발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겪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특히 교육부의 경우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을 국민들께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하루 만에 번복하고요. 또한 유치원 영어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절차들을 제시하고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혼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요 아까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낙선자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4강대사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이 두 분이 가 계십니다. 그 두 분, 중국대사·러시아대사, 두 분이신데요. 그분들이 다른 대사보다 결코 업무를 더 못하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아까 낙선자 말씀 주셨는데 외람되지만 미국 존슨 대통령은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꾸려 가지고 오히려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그 한 사례만 들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다음에 교육부와 정규직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에만 의존했을 때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 그 의견이 경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약속이 결과로 이어지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한반도는 국민의 힘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고통스럽고 시간 걸리니까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분명히 절대다수의 국민은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무려 6개월 동안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마는 그 고통이 싫어서 변화를 지체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족함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과제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부는 저는 가장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를 저 나름대로 한 다섯 개 정도로 추려 봤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둘째는 고르게 잘사는 경제, 셋째는 차별과 격차가 없는 사회,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다섯 번째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역, 이렇게 정리했는데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국정의 지표와 일치됩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미 국민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광온 의원 남아 있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 사개특위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저항과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더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것은 꾸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5위까지 추락했다 반짝 19위로 올라왔다가 박근혜정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에 지난해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고등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기업 혁신, 기업활동 성숙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IT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시대로 돌아간 것, 첫 번째 저는 그 이유,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질에 있어 특권 성장과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가 오히려 더 강화된 체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자유와 권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사회 복리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부분적 제약의 근거 규정도 두고 있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익이 되게 하기 쉬운 그런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특권 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문제인 정부가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대전환에 나섰는데도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환 결정률은 87%쯤 됩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실제로 전환한 건 약 48% 이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드리고 처우 개선은 그 다음 과제로 이행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고용 구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동자 25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고요, 43명은 9명 이하 기업에서 일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단가나 임금을 쳐주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현상,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가 청년 취업난에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위축, 고통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구조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합의처럼 협력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박광온 의원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중물 역할일 것이고 결국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광온 의원 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경제에서 3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공정경제 그것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장 성장과 경제체제, 이걸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제인 정부가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리듬을,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같이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큰바위얼굴이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여기는 아는데 한 분은 국내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인데요, 그분이 했던 것이 반트러스트법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지나친 횡포를 억제하는 법들을 만든 그런 분이시거든요. 미국 자본주의가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국 국민들은 그런 큰바위얼굴로 칭송하고 지키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온통 시장 만능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큰바위얼굴에 새겨진 그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지나친 폭주를 억제하는 제도를 만든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체제는 직접적으로는 2차대전 전후 처리 결과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수치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좀 더더 보이는 이 상황을 변경시킬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 또한 기대입니다.

○박광온 의원 글썄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중전협정은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연내 선언 목표’ 이런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것이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유엔으로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한 가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인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스스로고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일이지요.

제가 바로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또 바틀가 몽골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도 하고 문답도 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그 모든 분들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체제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긴요한 일이고요.

그게 1년 열흘 전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작년 9월 3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의미 있게 변했다는 것을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남북한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먹고사는 문제에도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 또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직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예전부터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였지요.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전문 맨 첫 문장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제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관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단기 4281년 9월 1일에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거기 보면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48년,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1948년이 대

한민국 30년이라는 뜻이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보 1호에 실려 있는 헌법 전문에서 1번 보시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제헌국회의장의 이름으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관보 1호에 헌법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책이라기보다는 최초 헌법의 전문이나 독립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일관되게 가장 장기간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존중돼야 하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은 오랫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 왔지 않습니까.

○박광온 의원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정부의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광풍은 몇몇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수많은 국민에게는 좌절이자 한숨입니다. 시중에서는 투기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표현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다수 서민들에게 절망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우리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시종일관 경종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고 충분히 그걸 억제해야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종의 대책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른바 중부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좀 뜸뚝미지근했다, 신중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 부동산 광풍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 데 투기세력들이 그

동의를 만들어 줬다, 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지독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인데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택 총공급은 10.6%가 늘었는데 2주택 소유자는 20%가 늘었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6%가 는 겁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 집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주택 소유량은 5.5% 늘었는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려 44%가 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왜곡,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망하는 곳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이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대책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생각들을 왜곡하고 또 잘못 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명부·전투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장례 5월 22일 목격’,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제제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본 적도 있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편파 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아니면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의 집단 살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하는 행위를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은 명예훼손에 그칠 수 없는 문제지요.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법률 개정에는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의원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서는 최초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애기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러한 가짜 정보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것, 이것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중대범죄로 규정합니다.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나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한다’, 독일의 이 법 조항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지극히 혐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짜뉴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회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말씀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권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로서는 지역이라든가 세대, 이념을 아울러서 통합을 이루고자 여러 정책도 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변화를 잘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결과로 갈등이 일부에 남아 있거나 또는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저와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국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와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저는 국가의 비전이나 발전 전략이 아닌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올린 것을

보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먼지털이식으로 무차별 수사·기소·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적폐 청산은 시스템은 그냥 둔 채 오로지 인적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단죄 대상은 모두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날만 새면 들리는 소식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입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1만 621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매일 압수수색이 평균 90건씩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여러 사람이 관련된 대형 사건 몇 건이 크게 문제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일부러 마구잡이로 영장을 남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 특히 불구속 재판이 헌법상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또 다른 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구속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순에 가까운 전전직 대통령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억지로 이것 네 재산 맞지 않느냐고 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 법치를 앞세운 정치 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정치보복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난국에 국민 통합과 협치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 차원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정부의 대승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전직 대통령 두 분께 닥친 일은 국가적으로나 두 분 본인께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또는 어떻게 됐다 하는 건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주호영 의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집권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캠퍼더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인사의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취임 두 달 후에는 앞으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는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청와대 비서관 64명 중에서 운동권 출신이 무려 16명, 시민단체 출신 9명, 지난 정부 출신이 4명입니다. 공기업, 산하기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늘 점심시간에 받았습니다.

○주호영 의원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페이지나 되는데 한 번 읽는데도 숨이 찹습니다. 누가 어느 백으로 어느 자리에 가 있는지 총리도 아셔야 하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호영 의원 대략 1년간 365명이나 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취임 후부터 1년 동안 하루에 1명씩 낙하산이 내려온 셈입니다. 그러니 시중에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 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다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양두구육이고 내로남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참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조차도 코드 인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같은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고 추천된 후보자들까지 합치면 대법원·헌법재판소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변 출신이 3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과거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고 헌법재판관후보자도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

명된 예를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 아래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해 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고르기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의원님의 주시고 싶어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호영 의원 민정수석 하실 때 바로 밑의 비서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배석 판사였던 사람은 판사를 그만두고 바로 지금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교감하고 내통할 것이라는 오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부하기관이 된 것이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인사시스템을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시스템에 따르는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측근에서 인사 농간을 해서 이런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둘 다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후보는 대통령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계시고요. 또 대법관의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지금 추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석태 비서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민망했든지 바꾸어서 트레이드로 임명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호영 의원 바꾸어서 일면식도 없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기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친한데 민주당이 임명하는 트레이드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 때마다 늘 억측이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인데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주호영 의원 공직을 대선 승리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낙하산, 이렇게 코드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나서서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특히 전문성이라든가 특별한 업무능력 또는 신뢰관계를 중요시해야 될 자리가 아닌 한 남발은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호영 의원 민주당의 20년 집권 전략이 상대 진영을 무차별 처벌하고 공직에 주요 사람을 심어서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만과 불통은 조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집착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성장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직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총액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시다라는 의원님께서 약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드린다,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비 지출을 줄여 드린다, 그리고 실업보험 같은 그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가계비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득주도성장 가운데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이른바 속도 조절의 인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2020년 1만 원이 무너졌다 그러면 결국은 21년이나 22년이나 또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작년 대선에서 5개 정당 모두 2022년 이전에 1만 원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단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를 함께 풀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호영 의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 달라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속도 조절을 언급하셨는데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 봐야 내년 연말까지는 최저임금을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내년 연말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주는 믿음이라든가 또는 그 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2년 만에 무려 29%나 올라갑니다.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이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이 ‘나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본인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각 부처 정책이 충돌하거나 문제 있으면 국무총리가 최종 조정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모든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가 적극 개입해서 조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발뺌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까 봐서 조심스럽습시다라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를 정하느냐, 그 숫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큰 틀의 조정은 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정상회담 두 번 하면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USB도 건네주셨는데 총리께서는 정상회담 내용을 다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국회와 국민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

가 아는 것은 거의 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주호영 의원**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청와대가 발표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지요.

○**주호영 의원** 그렇게 긴 시간 대화 내용을 그렇게 짧은 것으로 다 보고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부분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을 겁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유엔의 제재가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중요시하더라, 아베 총리는 이것을 중요시하더라, 그런 말씀을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도 기자들도 관심을 가졌겠지만 뉴스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주호영 의원**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에 재정적 부담이 가는 거라면 비준을 받도록 관계법에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주호영 의원** 그러면 국회 비준이 안 되면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적 선언으로서는 남는 거겠지만 실제로 행동을 해 가는 데 재정의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에 근거를 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오늘 아침 어느 조간 보도에 ‘국회의 비준과 야당 동행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번에 만약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 비용추계 4700억만 비준이 되는 것입니까, 향후 대북 지원 예산은 모두 그 비준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준이라는 것은 추계를 가지고 비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대북 사업의 종류나 성격이나 진척 정도라든가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동의해 주시는 것 범위 안에서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대북 협력은 만약에 이번에 비준

이 되면 추후에 더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비준이 어디까지 될지 또는 남북관계의 변동성은 늘 있는 것이니까요.

○**주호영 의원** 여러 추계가 있지만 2014년 금융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SOC 투자에만 153조가 들어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 다 이 비준으로 국회의 통제 없이 북한에 정부가 해 줄 수 있도록 비준해 달라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있는데 누가 추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약간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간에 이미 합의돼 있고 유엔 제재의 논란도 없는, 그래서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에 국한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내놓고 국회의 예산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되고요.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추계만 가지고 국회에 논의를 청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호영 의원** 저의 생각으로는 남북관계 비준은 이번에 비준이 되면 추후의 비준은 법률적으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수백억이 들지도 모르는 이런 비준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 좀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 당리당락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히 비핵화 약속을 받고 그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비핵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하다 보면 비핵화 안해 주겠나 이런 기대로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몇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들 통용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써 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하셔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노태우 정부 때의 비핵화 합의서도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주호영 의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북한이 속여 왔던 화전 양면전술 또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정부의 조치들, 한미동맹의 약화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무장 해제와 과도한 퍼 주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총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늘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며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가 모처럼 남북 간에 이루었던 합의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그리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는 그 측면도 매우 컸다고 아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정권 교체에 따라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 점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래서 이번에 비준을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 아니, 그러려면 충분히 설명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비준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할 재간이 없을 겁니다.

○**주호영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당리당략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지금 화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준동의안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호영 의원**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데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데 우리

만 탈원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사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선거 때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저한테 정의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 60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미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쩍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10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이라는 자해 결정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는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정화하고 블랙리스트 나왔다고 모두 구속해 놓고 이것은 그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국무회의 의결과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임시 중지가 됐습니다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더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결정의 공정성을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게 된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울진·영덕 원전이 백지화되어서 각 지역에 2조 5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연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총리께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도 몇 차례 뵈었습니다. 뵈었는데 실제로 일이 조금이라도 진행되다 뗏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말하자면 기대됐던 이익이 오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나 그 지역, 지자체 등과 소통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경북만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주 13% 증가, 전남 11% 증가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1인당 예산 규모를 비교해 봐도 대구 117만 원, 경북 118만 원, 광주 138만 원, 전남 321만 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총리께서 지사 하실 때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좀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가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습니니다. 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민생·경제 문제가 4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민심에 귀 닫은 오만과 불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오만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벌써 오만해진 겁니다. 성경 잠언에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통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리와 내각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영 주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중랑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은 새로운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는 3개의 국정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는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이 그것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집권 1년 4개월째를 맞은 이 3대 국정 운영의 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오늘 쟁점과 현안을 통해서 질의하고 또 제언해 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 3대 국정 운영의 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사실 어찌 보면 나라의 안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볼 텐데, 평화적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지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일부 보수 야당이 팔짱을 낀 채 탄지를 거는 태도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러한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첫째는 정부가 바뀌면 그 앞에 있었던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는 무산시킨 그런 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케 한 것은 국회 차원의 비준이라든가 하는 것의 효력을 항구화시켰더라면 정부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없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적 장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 또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홍근 의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한다면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의미, 어떤 효과가 있

고 만약 국회가 이것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남북관계건 북·미 관계가 직행하지 못하고, 직진하지 못하고 늘 주춤거리거나 유턴하는 이유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신뢰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비준을 해 주신다면 그런 신뢰 부족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남북 간에도 믿음이 생겨서 약속한 것을 서로 이행하고, 그 약속 중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그런 것의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비준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의원 그렇습니다. 야당들도 바라마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야당 의원들이 일부 지적하는 그런 예산 추계의 문제는 정부가 향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는 매년 예산 심사의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살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하문을 주셨습니다. 마는 비준을 한다고 해서 해마다 있는 예산심의까지 무력화시키고 아무거나 다 돈 갖다 쓸 수 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비준을 토대로 해서 그때그때 확정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회가 동의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홍근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다음 주에 있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들을 모시고자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청와대는 이번에 국회의장단 또는 정당 대표를 함께 모시고 가고자 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북한에 대해서 신뢰감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굳은 신호를 주시고 싶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호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권분립 훼손 또는 대통령의 들러리 역할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거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한 국민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국회의장단과 또는 정당 대표를 초대한다면 그때도 거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안보·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회에 조건 없이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 지도자들의 말씀이나 행동을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다만 평소에 늘 제가 바라는 한국 정치의 모습 이랄까 하는 것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치고 경쟁을 하더라도 누가 민족의 미래에 더 보탬이 되게 일하는가, 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지금 의원님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대정부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를 따지지 말고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비준안 동의 처리 그리고 또 향후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을 적극 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다음으로 가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관련된 쟁점을 여쭙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압축성장시켜 온 기존의 성장정책, 즉 투자에만 의존하던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병행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 절대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콘크리트 삽질 경제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사익적 특권 경제로 인해서 혁신성장

의 토대를 한창 갖추었어야 할 그 시기를 허송으로 보냈고 또 혈세도 너무나 아깝게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내도 이 혁신성장 부분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MF 이후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혁신성장의 모델을 세계시장에 우뚝 세워야 될 겁니다.

총리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빨리 만들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더 많은 지혜를 내서 그 일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이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 한 축인데 결국은 양극화는 심해진 상황이고 그간 성장의 유일한 엔진이라고 했던 투자가 부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기존의 성장 엔진인 투자에다가 추가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성장 엔진을 달자는 게 이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홍근 의원** 이러한 정책이 지극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여쭙습니다.

우리 경제가 야당이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입니까, 아니면 과장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심각한 위기라고 정부가 정의할 마음은 없고요. 다만 어떠한 경우 어떠한 정의를 내리더라도 고통을 당하시는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본 의원은 투자나 고용과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부진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를 침체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 경기침체 또 중국 관광객 감소, 여러 가지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쉬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정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업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같이 거론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중소 상공인들께 지불 여력을 강화하는 것, 이제라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참 저희들로서도 뭐라고 할까요, 최저임금의 결정이 7월입니다. 제가 내각에 들어간 게 5월 말이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미리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형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너무 길게 생긴 그런 일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에게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시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드리는 일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알바생을 포함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의원** 저는 문제가 이런 것을 좀 더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는 굳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보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좀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이고 동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총리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동의합니다.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힘을 합쳐서 이 고통의 강을 빨리 건너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물론 국회도 지금 야당의 반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발목이 잡힌 채 한 치의 진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야당 또한 당연히 이런 정말 한숨 쉬고 울부짖는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70년 낡은 경제 구조·체질을 이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부가 그 이유와 목표와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작년에 아마 그런 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국민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담화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이다 유엔 총회다 하는 일정들이 연달아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말씀을 국민들께 올리는 것이 좋을지 하는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의 그 충심의 말씀을 잘 감안해서 대통령과 상의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은 십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정 운영의 축인 적폐 청산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국민적인 개혁의 열망 또한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수사 외에 실질적으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게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시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관료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무사안일주의 또는 보신주의에 빠

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복잡하고 남북관계가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데 휩쓸릴 것이 아니라 국가 대개혁의 길은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쭙어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대해서 총리님과 각 장관께서 꾸준히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물론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벌어졌던 대형 범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자치분권은 엇그저께 국무회의에 보고가 됐고 마지막 남은 재정분권 문제가 거의 최종 조정 단계에 가 있습니다.

재벌 개혁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가령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6월에 있었는데 지금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정부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 가계약만 해 놓고 결국은 이사를 미루는 격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또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가 더 많이 퇴색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참 어렵게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조문화된 법안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게 낫겠다, 사개특위가 구성되고 가동될 테니까,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선에 멈추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에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내라는 분부가 계시고 그래서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문의 형식을 빌리는 정부의 의견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잠시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

오십시오.

양승태 문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당사자들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의원** 심지어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나흘씩이나 끌다가 기각된 초유의 상황도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검찰 수사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다수 기각으로 인해서 강제수사가 제약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국정조사를 했어도 열 번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까지 나서서 법원의 수사 방해를 경고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사법부에서 영장전담판사 교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문제 역시 법원 내부에서, 판사 교체 여부는 내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견해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잠시 나오십시오.

작년에 행안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로드맵에 기초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저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의원** 그 방향,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금 현재 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혹시, 결국 아마 거기에 걸맞은 정도의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안이 아닌가라고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 마지막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조금 지켜봐 주시지요.

○**박홍근 의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 주도성장 안착이나 남북관계에 올인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 좀 드린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결국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사자, 특히 무엇보다도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국민의 여망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늘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의원** 그러면 재정분권은 언제까지 결론을 지을 생각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금 마지막, 양쪽에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입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야 하는 저희 행안부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의 여지 자체를 총리께 보고해 놓은 상태고 총리께서 양쪽 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셔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대충 밑그림을 완성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하고 행안부 간에 재정분권과 관련된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총리가 나서서 속도 있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분권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몇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몇 주일 동안 양 부처의 생각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안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홍근 의원** 그리고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 되어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홍근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제2 국무회의라고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의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대통령께서 제안했으나 폐기된 개헌안에는 제2 국무회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헌안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내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어떤 규정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뭐하지만 국무회의와의 차이는 우선 안전부터 기본적으로 다르겠지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차관회의라든가 각 부처의 사전조정이라든가 또는 당정협의라든가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치 국회의 본회의처럼 의결하는 기구로 온다면, 시·도지사님들이 함께하는 과거에 우리가 제2 국무회의라고 불렀던 그것은 좀 더 정치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좀 굵은 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정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박홍근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제2 국무회의 성격의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부의장도 시·도지사 중에서 한 명이 한다든가……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당연합니다.

○**박홍근 의원** 아니면 국무회의와 달리 시·도지사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안전상정도 할 수 있다가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자치분권 정신에 맞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도, 제가 지사를 할 적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통령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간간히 참석해 주시되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으면 어떠냐 그런 논의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박홍근 의원** 이러한 국정 3대 축을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이제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조언드리겠습니다.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투기적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동자금 1110조가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하지 않은 다른 대책은 한계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그런 논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논의에 참가했었고요, 초기에는 제가 참가했습니다.

큰 기둥은—순서 매기는 것은 뭐합니다—1번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 또는 신혼부부들께 주택을 좀 더 싸고 좋게 공급해 드리는 일 그렇게 사용처를 명시해서 시행하면 국민들께서 좀 더 신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고통도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국민을 모시고 그 위대한 행진을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영**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준비 안 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파괴, 할아버지 손자사랑 식 대북 정책, 보수파 씨 말리기 식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입니다.

국정운영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총리께서도 오전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본다고 답변하시던데, 그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내년에 해야 될 행사의 공식 명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김태흠 의원 예, 그것은 압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첫 문장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총리님,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아기가 잉태된 시점을 생일이라고 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첫 헌법부터 그러했고 지금 헌법에도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한 날이고 임신기간을 거쳐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념해

왔습니다.

○김태흠 의원 지금 총리님의 말씀의 뜻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정신, 우리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도 바로 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기념해 온 세월이 길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그렇게 피해 나가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김태흠 의원 국가 구성의 3요소, 제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아신다면 답변하셔야지요. 영토·국민·주권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영토와 국제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시에 우리의 선열들이 헌법을 만드실 적에 그것을 몰라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흠 의원 헌법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임시정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태흠 의원 그러면 임시정부로 건국이 되었다면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부르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당시에 우리의 국가가 부당한 간섭과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태흠 의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을 써야지.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매우 일천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제가 헌법 얘기를 할게요.

제헌헌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그 뒤에 ‘민

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의의가 있고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이지도 않은 이런 논리에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200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같은 것을 역사 왜곡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의원님의 말씀 중에도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공식적인 제도나 오랜 세월의 우리의 공식 또는 민간에서도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태흠 의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그러면 북한이 9·9절 이 부분을 70주년으로 며칠 전에 기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권 창건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에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고려 건국을 태조 왕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은 제헌헌법이나 현행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저는 뭐냐 하면 헌법에 나와 있듯이 법통이나 아니면 정신을 계승하는 거지, 건국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구성 요소라든가 아니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중간에 48년도부터 48년도까지 미군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지요. 되새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내 소란)

좀 들으세요.

이게 지금 48년도에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일각에서의 생각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헌헌법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한 것이 그런 의의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립'을 줄이면 '건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흠 의원 총리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정권이 건국이라고 해서 건국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론분열을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헌헌법 한번 읽어 보고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다 읽어 봤어요, 열 번 읽어 봤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는데 총리께서는 촛불혁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촛불집회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훗날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혁명의 정의가 뭡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 무려 6개월간 연인원 1700만 명이……

○김태흠 의원 아니, 혁명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학문적 개념 정리까지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4·19는 혁명입니까, 아니면 5·16은 혁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4·19는 혁명으로 정의돼 있고요.

○김태흠 의원 5·16은요?

○국무총리 이낙연 5·16은 우리 법체계에서 이미 군사정변으로 정의된 바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혁명을 말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이 바뀌는 권력 교체로 국가체제 또는 정치체제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런데 4·19는 헌법도 바뀌었고 또 정권도 바

꾸었으니까 혁명이지요.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으킨 사람들은 국가체제가 바뀌었으니까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데 촛불집회가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이라고 한다면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변화를 말할 적에 혁명적 변화라고 말을 쓰는 것처럼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6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혁명적인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일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혁명적 변화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혁명적인 변화다 그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김태흠 의원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김태흠 의원 남아 있는 과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저의 생각을 물으셔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흠 의원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모두 민심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 집회 모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원님께서 네 생각이 뭐냐고 하문하셨기에 저의 졸렬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정부의 대표로서 총리의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적 또는 역사적 정리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왜 본인의……

지금 총리는 정부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것인데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의 생각 얘기하셨으면 총리 직책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라니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

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찬탈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김태흠 의원 그런데 왜 혁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러한 것들……

○김태흠 의원 그리고 본인의 그런 총리 자격, 입장에서 정부를 대표해서는 왜 피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적, 역사적 정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저희는 총리님께서 총리로 임명되실 때 그래도 안도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리께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 뒤로 정계에 입문하셔서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전남지사도 하시고 그래서 청와대가 운동권 출신으로 참모진이 다 짜여질 때 어느 한 쪽으로, 이념적으로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중심과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총리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물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 저희가 볼 때는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운운하고 이러는 저의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이낙연 저의라기보다는 6개월 동안의 광화문 함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촛불집회의 민심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양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고 또 반대 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서도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청년희망재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새마을운동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촛불정신은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태흠 의원** 또 촛불정신은 정치보복의 도구도 아닙니다. 촛불은 민심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것도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천심이고 하늘의 뜻이고 역사적 소명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마치 전유물인 양, 특권인 양 그러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고 이러한 부분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보복은 생각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도 정치보복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흠 의원**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도구로 쓴다는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보복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경찰이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 낸 시민 2만 명의 금융계좌 조회한 거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런데 그 고발인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고 그래서 태극기 집회의 주최 측이나 촛불집회 주최 측 모두 불법적인 모금운동 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하나는 경찰에다 했고 하나는 검찰에다 했고.

그런데 촛불집회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또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고발인 조사는, 여기 법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관한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장관한테 물어보시지요.

○**김태흠 의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쪽 모두 회비 모금에 문제가 있다면 공평한 법 잣대를 들이대야지, 이 정부 법은 완전히 고무줄 법이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리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자세한 것을 해당 장관께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런 기준이라면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모든 단체의 모금행위라든가 아니면 회비 사용 등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적 절차로 보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보훈처가 지금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 처벌 강화 입법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태흠 의원** 이걸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입법은 아닐 겁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처벌 강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태흠 의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비우호적 단체, 비판세력들만 골라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비판세력 길들이기이자 이걸 표적입법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1963년에 그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압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총리님,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고,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에 법안이 나와 있다면 국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전교조 이런 데는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라는 법안을 내고 그리고 보훈처,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 처벌 강화 입법 추진하고, 이게 모순이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국회에서 조화롭게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아까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더니, 본인의 의견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건 둘째 치고.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당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모순이고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까지 다 알 재간이 없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총리님께서 아까 박영선 의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대통령께 여러 가지 밖의 일이라든가 정책 건의 같은 걸 하느냐’ 그랬더니 ‘국회 식으로 여기 와서 하듯이 한다’ 이렇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완곡한 표현을 쓴다는 뜻으로 그랬습니다.

○**김태흠 의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노회하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건의를 못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흠 의원** 좋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국무총리 이낙연**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정치문화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방식은 제가 오랫동안 그려 왔던 정치언어의 한 부분입니다.

○**김태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것 비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국민께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되고 또 북한이 우리의 약속을 좀 더 믿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하였다, 나아갈 것이다, 역사적 과제다 이런 잘해 보자는 정치적인 선언을 비준

동의해 달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내용에는 그런 정치적 선언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11일 날 제출한 비준동의안 비용추계, 이것 제가 볼 때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기관에서 수십조 많게는 100조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4712억만 제출했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번 판문점 선언보다 훨씬 더 광범한 합의를 담고 있었던 2007년의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결과에 따른 추계가 그때 1900억쯤 됐을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저희 지역구를 지나가는 장항선 철도 32km 선형 개량화 사업을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8500억 들어갑니다.

(「마무리하세요. 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삼사천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하여튼 2007년의 경우에는 추계가 1900억이었습니다.

○**김태흠 의원** 얼마 전 대통령께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연내에 북한 문제를 진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영**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가세요.

(웃음소리)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노동조합, 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의 정당,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아주 특별한 기자회견에 다

너왔습니다. 무노조 경영 50년 역사의 포스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들어 보이며)

안타깝게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스코 노동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노동자들처럼 이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가면 뒤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숨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가면 뒤에 본인들의 신념을 숨기고 정말 분노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대일청구자금을 쏟아부어 설립한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용광로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희생과 고통도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이끌어야 될 기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업 포스코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의 자원외교라는 이름의 부실투자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정경유착, 사법농단, 로펌권력, 언론과의 유착, 노조탄압……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드러날 비리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회장의 자리에는 판도라의 상자의 키를 쥔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각종 경영 비리와 비자금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CEO를 비롯한 임직원, 협력업체와 거래 기업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검찰이 기업 비리 대상으로는 최장 기간 포스코 비리를 수사했지만 부실수사라는 논란 속에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증거, 증언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진실의 무덤이 돼 버린 기업에 공정한 경제질서와 노동 존중 일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추혜선 의원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을 드렸

는데요. 그동안 몇몇 내부고발자와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포스코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경영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 경영과 조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나섰습니다.

노조 할 권리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이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셨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문자 그대로 국민기업입니다. 그런 국민기업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세월을 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가 노사간의 빠른 대화로 원만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것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가시밭길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본사 주변의 많은 현수막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이분들이 이 가면을 벗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노조 할 권리는 민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가 돼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야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추 의원님은 ‘부족하다’고 나무라실 것 같습니다.

○추혜선 의원 공무원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이 있지요. 지금 복직 못 하신 분들이 한 몇 분쯤 남아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행안부장관을 믿고 있는 통에.

○추혜선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해직당한 공무원 분들이 총 오백삼십 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복직 못 하신 분이 136명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세 분이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리고 현재 세 분 정도가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리고 정년 초과자가 10여 명씩 이렇게 매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지체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해직기간에 대한

보상도 없는 특별채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부당징계와 해고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지 않아도 아침 출근 때 오후 퇴근 때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현수막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빨리 내주고 함께 상의했으면 합니다.

○추혜선 의원 상의하셔서 아주 현실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인 것도 문제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혹시 지금 청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총리가 직접 방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해직자 조합원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원과 공무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당연하고 또 상식적인 규범입니다.

더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은 사법농단 사례 중 하나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고용노동부가 써야 될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필해 줬다, 희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들이 통째로 밝혀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검토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일단 사법부에 계류돼 있는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전교조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주실 여지가 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 아쉬움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적폐 청산은 따로 가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은 따로 기다리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적폐 청산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단까지를 행정부가 고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추혜선 의원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부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영장 발부율도 기록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도 몇 차례 논의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추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간의 재판거래 이게 드러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까 영장 발부율 말씀만 들었는데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깐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사법부 내부의 일에 대해서 행정부의 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추혜선 의원 사법농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빈번히 기각된 것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좀 해석을 해 보면 재판부는 수사의 성역이라는 의미 그리고 재판도 하기 전에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법원은 셀프 개혁안을 만들어 은밀하게 입법 로비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를 찾아 정부입법 시도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국회에 와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셀프 개혁안 문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수사의 대상입니다. 여당이 주장한 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별재판부 도입도 적극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 방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저는 제안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사법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법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법률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 보는 것은 국회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 좋은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국회에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살려서 개혁의 방향에 녹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근 사법부와 관련된 일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정말 이래서 어떡할 것인가 하는 큰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혜선 의원 정말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대통령께 건의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존경하는 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셀프 개혁안 문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십니까?

○추혜선 의원 예, 법원 개혁 입법과제.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런 비슷한 문건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보고받으셨다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추혜선 의원 법원이 이런 식으로 정부입법 로비를 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것 문제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와서, 법원조직법 개정하려면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입법 로비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혜선 의원 저도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에게만 설명을 한 것이어서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로비인지 협의인지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이 문건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협조를 구하는 설명을 하는 이 방식 자체도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된 법원이 협조를 구한다고 이것을 그동안 관례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법원조직법 일부 내용의 개정 필요성을 와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수처 설치에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설치방안 발표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추혜선 의원 처장 추천과 임명절차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인사청문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두 분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분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법무부 안은 사실상 처장을 여당이 추천해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추혜선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야당이 처장을 추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원내 야당이 6개 있습니다. 각 야당에서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임명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독립성·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이 추천한 분이 처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야당만으로 추천을 하는 것 역시 여당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국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국회에서 협의는 하겠습니까만 좀 더 폭넓게 또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백남기 농민,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용산참사 사건 조사 결과 발표한 것 아시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런데 쌍용차 노조 해고자들, 용산참사 현장에 계셨던 철거민들 그리고 백남기 농민과 같은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이 아직도 국가가 제기한 손배상 청구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건 중에는 소가가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기여할 수 없는 사건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서울고검의 수행청, 경찰이 소송지휘를 건의하면 서울고검과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경찰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국가가 손배소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도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고요.

총리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절박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기업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갑질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대기업 갑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결국 누구와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설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하지는 않는지요?

○추혜선 의원 을과 을은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고요, 비극적이게도. 김앤장과 싸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갑질 피해를 호소하면 할수록 김앤장의 수입료만 올려 준다, 지금 그런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 상황에 중소 상공인들이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 어디겠습니까? 총리님, 공정거래위원회겠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조직적인 회대의 채용비리 이것은 전 국민이 분노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아주 묵은 은밀한 관행이었고 ‘이게 공정위만 있겠냐? 금융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장이 몇 차례 사과도 했고 그 문제와 관련이 되는 부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직무정지가 내부의 아주 혼란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좀……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런 상태가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상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크는 꺼졌지만 의원님들께 한마디 마지막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같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국회 정개특위 운영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했음에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기존 합의를 뒤집고 정의당을 빼고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하자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7월 교섭단체들간에 합의한 대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가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영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1야당의 김병준 대표께서 ‘북한은 억제와 압박이 있어야 회담 테이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여전히 대결과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2013년 2월 김병준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원유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대북 문제 대응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서 북한을 압박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냐고 비판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김병준 대표의 소신입니까? 거래의 운명이 걸린 사안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말도 저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결과 압박 때문에 지금 제2차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입니까?

김병준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대변신을 합니다. 당시 야인 신분이던 김병준 대표는 2015년 7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금 공기업 지방이전, 세종시 등으로 나타난다’면서 ‘힘에 부치더라도 미래에 평가받을 각오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가족을 분리하는 가슴 아픈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숨 막히는 이러한 변신을 보면서 자신의 정략적인 이유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인 소신과 일관성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구태정치를 떠올릴 것입니다.

김병준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대안 제시는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세력의 선봉에 가담해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태를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의 과밀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표에 보드시피 국토 면적 불과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딱 절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고 100대 기업에는 90%가 넘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 새롭게…… 취업자 공고 수는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역내총생산도 여전히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시·군·구 226곳 중에서 89곳, 약 40%가 20년 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의 위기 속에서 올해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치분권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금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개헌을 이루자고 하는 여야 공동의 합의가 무산됐고 또 대통령께서 그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과 본인의 오래된 철학을 담은 그런 개헌안을 냈으나 폐기된 것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 그렇지만 총리님, 비록 올해의 자치분권 개헌이 무산은 되었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는 여전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제도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아울러서 합의 수준이 높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또 실천하는 정기적인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문제의식은 최 의원님과 똑같이 합니다. 수도권과 과밀화 또는 지나친 비대화와 지방의 과소화가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체에 비하면 머리는 크고 손발은 가늘어지는, 팔다리리는 가늘어지는 이런 상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크게 읽혔던 책입니다만, S&P턴가요, 미국의 경제조사기관에 속한 조사원들이 중진국에서 도약할 수 있는 나라들을 골라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스(Breakout Nations)'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약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개의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패가 얼마나 심하냐 또는 개선될 수 있는냐인데 그 많은 기준 중의 하나가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크냐 작냐, 크면 도약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것이고 격차가 좁을수록 도약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연구가 그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절실한 과제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은 제2 국무회의라고 불렀던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떤 식으로 관여할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시·도지사와의 정기적인 회의체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 전에 자치와 분권 또 개헌헌법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또 합의하기 위해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부터 회의체의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과 또 야당의 대표까지 포함하는 고위급 회의체가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나머지 재정분권 문제가 최종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들을 밟아 가면서 아까 말씀 주신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과 총리가 참가하는 시·도지사협의회보다 좀 더 넓고 많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두는 방법이 있을까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지난번 이해찬 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 361개 공공기관 중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154개가 지방 이전이 거의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이르는 162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105개의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개가 수도권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공동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

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법률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부로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부적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까지는 우선은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를 더 정착화·활성화하는 일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최근에 농식품부가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구매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입 원가가 좀 비싸더라도 혁신도시가 있는 그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해 달라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방과의 상생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가 좀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소재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영 의장직무대리,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이낙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법에 보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있는 소재지와 받고자 하는 지방간에 또 입장이 많이 다르고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심사는 아주 공정하면서도 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서 그 지방으로 이전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신규 기관이라면 조금

갈등이 좀 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 의원 이미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설될 때부터 특정 지역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재지를 정한다면 아무런 갈등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특히 신설되는 기관은 그렇게 대규모의 기관이라기보다는 기존 기관과의 연관 기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그 연관성 같은 것을 따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 의원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식은 주로 혁신도시 건설하면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된 지역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는 가령 지금 우리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또 이전 공공기관과의 결합을 제대로 해 낸다면 정책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이후에 20년 가까이 흘렸지만 작년까지 3만 불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모델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성장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 집중 육성 전략에서 지방 중심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지방의 발전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무슨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도표대로 모든 자원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저도 지방분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또 재원을, 만약 지방에 재정 이양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다시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서 이번에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이양일괄법률 이런 것을 반드시 법제화해서 국가 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됩니다. 또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 등을 도입해서 지방재정도 확실히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위한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 또 여러 절차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금 법제처에서 최종 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의원** 10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최인호 의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비상한 노력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지의 뜻을 누차 밝혔고 또 지난번 개헌안에도 포함시켰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는지 또한 2015년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을 2 대 1로 하는 내용을 전제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선거제도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깐요 정부가 의견을 말하는 건 일정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오랜 신념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라고 하는 화두를 주시면서 그러한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최인호 의원** 다음, 정치 개혁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2000년도에 남녀동수제를 헌법에 명시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이미 0%대로 진입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 사항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출산이 극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남성 중심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대만,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남녀동수제와 같은 과감한 정치 개혁을 법률에 반영해서 여성에 편중된 여러 가지 제반 제도와 환경들을 바꾸는 것이 첩경이고 이것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역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볼 적에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과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광역단체도 되고 기초자치단체도 됩니다. 해남군의 경우는 2.46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2.3명대로 내려 왔습니다. 세종시가 1.8명이 넘습니다.

두 지자체가 성공한 이유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해남군은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책

을 다 쓴 그런 경우입니다. 세종시는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의 직장이 안정돼 있고, 출산휴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출산과 보육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도 내 직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보장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 그리고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고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본질적인 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안정적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것이 보충되지 않고는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민관 모두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장, 출산과 육아가 끝나고 돌아와도 그 자리가 보장되고 또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더 심하게 말하면 경력단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더 해결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마지막으로 캠퍼드 인사, 이런 지적을 오늘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무적 인사라는 규정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에 임명해서 책임 있게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을 저는 정무적 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정무적 인사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 대통령제의 책임정치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지,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정부 인사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함께 일을 해 봤거나 일을 하면서 신뢰가 쌓였거나 서로를 잘 아는 또는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같이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우리가 훨씬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른바 채용비리,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짓은 철저히 배제해야 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무직,

어떤 기관의 책임자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은 신뢰나 업무의 전문성 또는 개인적인 경험의 공유, 생각의 공유 이런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 앞으로 방금과 같은 총리의 그 소신대로 어떤 정치적인 공세에 소극적으로 머물지 마시고 정무적 인사의 필요성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다만 전문성이 있느냐의 문제 제기는 저희들도 좀 더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1948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왔던 모든 가치들이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요즘 엄청난 불안감과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그리고 책임정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입법·행정·사법, 세 기관과 자유언론이라고 하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모든 작동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부정되며 책임정치는 실종됐습니다. 또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제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촛불혁명을 언급했고, 방금

전 총리께서도 정말 교묘한 말로 촛불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인 법무부장관이 생각하는 혁명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헌법 전공은 아니요 형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용기 의원** 법학자로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 또 촛불집회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촛불혁명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혁명’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의 갑작스런 변화 이것도 혁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 왜 이 정권에 속한 분들은 혁명의 의미를 그렇게 일부러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고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편 갈라서 진영으로 혁명으로 처단하고 개혁해야 될 대상과 그 주체인 사람들을 나누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의의는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가 이미 있습니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거다, 국가체제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데 촛불은 비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의 결과가 뭐니까? 헌법과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정용기 의원** 그리고 촛불시위에 당시 참여한 시민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무엇입니까? 탄핵은 헌법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치체계가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혁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진행됐던 게 이게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아전인수식으로 규정을 해서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저의가 뭐니까, 도대체? 이것은 저는 이 정권이 촛불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보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가 정부 부처

마다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 TF 설치하고 심지어 언론기관인 공영방송 안에도 마치 혁명위원회 같은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폐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합법적 기구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감사 행위가 합법적 행위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편 가르기를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적·역사적인 의미,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사실이 드러난 그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보복이나 정치적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기 의원** 제가 질문한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기구와 중복되거나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KBS 안에는 방송법에 의해서 감사실이 이미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불법 기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KBS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 촛불시위가 혁명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 내지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용기 의원**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미 이념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서 비판을 받고 해

산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검사들 내세워서 법원을 압박하고 법관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관제·노영 언론까지 맞장구를 치고 나서는 모습이 정말 가히 가관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왜 이렇게 사법부 장악에 안달이 돼 있는가, 오늘도 대법원에서 있는 행사를 보면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 점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사법부는 장악될 수도 없고 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국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에 사법부가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으로서의 기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사법부에서 있었다고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도 의원님께서도 같은 희망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의원 총리님의 지금 답변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과연 공감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정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군중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 연상이 됩니다.

차베스는 사법부 장악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결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인 정부가 즐겨 쓰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나 지극히 선동적인 구호 역시 차베스가 외쳤던 ‘La gente es lo primero’ 이것을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선동 정치로 일관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한 사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망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연상은 자유지만 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친 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의원 연상은 자유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상하는 국민이 많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연상은 자유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국민……

○정용기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반의회주의적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는 협치를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협치의 전제조건, 협치의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협력하면서 정치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의원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용기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정권, 특히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고 과연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 상대가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1야당을 적폐 그리고 청산 대상 이렇게 삼아 왔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5부 요인 간담회 자리에 아마 총리께서도 함께하셨을 텐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아직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마치 임금이 타이르듯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일부 대상자들이 방북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꽃할배’ 운운하면서 방북 요청을 했어요. 참으로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식이 있고 이게 비서실장의 오만함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반대로 시중에는 ‘대통령은 오히려 허수아비고 임종석 실장이 실권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과 임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제1야당을 청산 대상이다, 적폐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 지난달이었습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안

드렸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은 8월 16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대통령께서 정중히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덜렁 임종석 실장이 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의 관계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입니다. 임종석 실장의 ‘꽃 할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의원 대통령께서 그렇게 험치 생각이 있고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잇단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도 대통령이 어깃장 부리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실제로는 국회를 존중할 뜻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9월 1일 날 제2차 적폐몰이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만 한없이 관대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한마디로 ‘북교내공(北交內政)’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바꾸고 국회를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자세를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요.

아까 한자로 나온 네 가지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야당들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용기 의원 다음은 이 정권에서 책임정치가 어떻게 실종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책임을 과거 정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탓으로 돌립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조선 시대에 책임을 돌리지’ 이런 얘기까지 SNS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경제 파탄 지경에 이르고 54조 원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5000개 만들어 대니까 국민들은 ‘일자리 1개에 108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미친 정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책임져야 될 시기가 오면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시중의 얘기를 전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의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정용기 의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인사와 관련한 7대 비리 관련자가 넘쳐나는 인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7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면서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가 총 10명이지만 지금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끝나면 늘어나겠지요. 또한 7대 비리 등에 걸려서 청문회 문턱을 못 넘고 자진사퇴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적폐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적폐라고 합니까?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이런 정권 아닙니까?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에 부분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참사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마가 5명 있었습니다, 장관급의 경우. 과거 정부보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에 농림부장관이 도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 빼 놓고는 내각 개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편의 요인이 그렇게 강한 만큼의 큰 스캔들이라든가 실책이라든가 그 정도가 비교적 없었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개선 과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 5명, 차관급 9명의 교체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 참 총리께서 인식이 너무 안이하시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방송의 기능과 중요성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제4부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위 혁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반대파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에게 모 공영방송 종사자가 ‘저

도 우리 회사 뉴스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땀문뉴스, 극도의 편파 방송으로 모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에, 다른 공영방송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외면하겠습니까?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해야지 땀문뉴스로 아부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한없이 부관참시를 하고 계속 칼을 들이대는 이것,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총리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개별 회사의 시청률 제고 문제는 개별 회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일이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견이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1년 전에 비해서 20단계가 올라서 43위가 되었습니다.

○정용기 의원 총리님, 지금 개별 회사의 시청률 문제로 이것을 그렇게 폄하해서 생각하실 문제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만약에 모든 언론사의 문제라면 모든 언론사 시청률이 전부 낮아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기 의원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넘어갑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의 산업화·사업화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성장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용기 의원 저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최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원안에서 무려 4분의 1 이상인 1750억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정권에서 시작된 사업이라서 이렇게 짝둑짝둑 잘라내니까? 아니라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사업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지요. 그리고요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 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의식해서 또는 어느 정권에서 시작했느냐 그것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정용기 의원 지금 충청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점……

○국무총리 이낙연 그리고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국회에서 지혜롭게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국회 논의도 논의지만 총리께서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축적을 잘 활용하고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가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통계 조작 시도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작된 예산까지 내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퍼주기 예산, 나눠 먹기 예산을 소위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이라는 말장난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드디어 이 정권을 조작 정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 정권은 결국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정권이 심판을 받기 전에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를 보십시오. 재정 파탄을 통계 왜곡으로 숨기더니 결국은 구제금융 요청에 이르렀습니다. 조작 정권으로 인해 크나큰 대가를 결국 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할 때 똑바로 하지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보릿고개, 세계 최빈국, 원조받던 나라를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임기 5년의 시한부 이 정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법치주의와 의회주의와 책임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방송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아니, 창피하지 않아?」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지난 9년 동안 똑바로 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주승용** 정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국정 운영 행태와 현 정권이 생각하는 개혁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진정성에 대해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여독은 풀리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팬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청와대정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가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핵심 정책의 논란 속에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국정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내각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현장을 방문하고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합니다. 사실상 정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태규 의원** 책임총리제는 지금 잘 실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되고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

고요. 매주 한 번씩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이 있고 매주 한 번씩 고위 당정청 회의를 총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그럼 총리께서는 지금 총리직 수행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량 부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 했던 의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지는 변함없습니다마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다 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태규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공개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부총리를 제치고 설명하는 것이 책임총리, 책임장관 취지에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를 제쳤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때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설명할 때도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의 총괄 책임은 경제부총리에게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정부를 대표하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참모가 나서는 것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내각의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총리와 부총리, 장관이 나서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모는 대통령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뿐이고요 국민을 상대로 또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각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아마도 그때 장하성 실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이나 어투를 총리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속도 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두 분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두 분이 함께 참가하는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2020년 시급 1만 원 달성의 목표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는 대통령의 고백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총리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는 일, 의료비 절감을 포함한 생활비 지출을 줄여 드리는 일, 실업보험 또 구직수당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가계지출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은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높여 드리는 일도 예를 들면 EITC 확대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이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그중의 일부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약속의 이행이 어렵다는 고백을 하신 것으로 이미 속도 조절이 시작됐다면 앞으로 지혜를 같이 모아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해도 얻고 싶습니다.

○이태규 의원 지금 문제인 정부와 같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 기조에 놓고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건강부회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선진국가들, 특히 서유럽·북유럽 국가들의 광범한 복지정책도 그런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그러면 총리의 말씀은 이 제도가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효과를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부분적인 고통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감

안해 가면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보듯이 청와대가 내각을 제치고 장관을 제치고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공직사회는 방향을 잃고 복지부동하며 다음 정권을 기다립니다. 총리께서는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하고 변명하시기 보다는 국무총리 이낙연의 자존감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고요. 장하성 실장께서는 그런 턱없는 욕심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태규 의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제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고용 증가율이 사실상 0%인데 청와대가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논평을 내면 서민들은 정말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해석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저는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현 정부는 현재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이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의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서민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라는 것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께서도 9월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총리님, 변화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고통, 그 고통을 받으시는 국민이 적건 많건 그것은 우주처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그렇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에 기득권과 특권세력에게 개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의 변화와 개혁은 거꾸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기득권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고 없는 사람, 서민들만 고통받는 변화를 좋은 변화, 올바른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의 충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갖지 못하신 분들, 가난한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참으로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가진 자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적폐 청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야단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태규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여기의 피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의 피해가 다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피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과정에 이게 올바른 변화라면 과연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올바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야말로 뼈아픈 일이고요 그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적으나, 많으나를 떠나서 한 분 한 분의 국민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개혁의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면 기득권이 먼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공직사회가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저는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고통당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니면 총리께서 공무원 증원 철회, 공무원 임금 동결, 정부부처 기관 운영비와 특활비 대대적 감축, 공공부문 방만 운영과 부조리 척결 등 공공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여 정부도 고통분담할 테니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공부문의 인력 증원은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서비스의 증가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나머지 공공부문의 더 많은 자기혁신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과제이고 저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더 박차를 가해서 공공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그러면 지금 서민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내년도에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태규 의원** 그것으로 현재의 고통이……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태규 의원** 저는 정부가 고통분담에 적극 나선다면 국회도 정치권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은 유난히 소통과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면 소통과 협치를 국회와 야당이 청와대에 협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양 동행을 거절한 국회와 야당에게 당리당락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는데 평양 동행을 거절하면 당리당락입니까?

총리께서도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이 당리당락 때문에 거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해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대통령께서 당리당락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청와대가 정치를 정말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라는 아쉬움을 저는 갖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들의 동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특사단이 방북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를 의장단과 야당 대표에게 보내서 방북 상황과 결과를 진지하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대중국·대일본 특사는 바로 보내면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야당 당사에 무게감 있는 야당 특사는 왜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에게 평양에 같이 가 달라고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하시면 대통령이 격이 떨어집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정상회담 이후에 정당

지도자들, 국회 지도자들을 모셔서 설명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5부 요인 점심 때도 제가 말석에 앉아서 있었습니다마는 안보실장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화를 못 드린 것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청와대가 풀지 못하면 총리께서라도 직접 나서서 야당을 방문하고 요청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도 부탁을 드린다면 민족의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공개리에 더 큰 문제로 분출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저는 이 문제를 키운 것은 국회의장단이나 정당 대표들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시지만 편한 사람들만 만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세력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5당 대표라든가 5당 원내대표를 뵈었는데 전부 칭찬만 해 줄 거라 해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이태규 의원** 올해 1월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을 만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뵈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의식을 가지고 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경위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총리께서는 야당 외에 정치적·정책적 반대 또는 비판 세력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필요 때마다 만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엇그저께 텔레비전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하신 교수님도 제가 모셔서 막걸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소상공인연합회는 만나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까지 그 분야는 아무도 못 만났는데요 한번……

○**이태규 의원**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장 절실하게 피해를 입고 가장 절실하게 우리의 처지를 살펴달라고 주장하는 이 단체를 여태 아직 안 만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분들은 중기벤처부 장관이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함께 뵈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저는 책임총리로서 정착되려면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과 장관 중심으로 정부정책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당정이 활발해지고 정치가 살아납니다.

총리께서는 매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태규 의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는 직언하실 건 직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 직언하신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횡수로 세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중요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표현은 완곡할지라도 제 뜻이 전달되게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한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두 분의 그때 의견은 같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인식이 같으나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태규 의원** 총리께서는 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임명장을 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해 달라, 야당 그리고 지방과 충분히 소통해 달라, 무엇이든지 의견을 내 달라,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와대가 비대해지면 한국의 국무총리는 설 자리를 잃게 돼 있는 것이 한국의 권력구조입니다. 그래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대한 청와대를 반드시 축소 개편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내각 위의 또 다른 특별내각입니다. 상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이 특별내각을 개혁해야 합니다. 내각과 집권 여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건 숫자가 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의식과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모시는 그 누구도 저에게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용인할 사람도 아닙니다.

○**이태규 의원** 당연히 청와대 비서진이 총리께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비대해진 청와대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가 본질인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렸는데요. 직원의 숫자 때문에 책임총리제의 성패가 영향받을 것이다, 그 정도라면 총리가 한심한 거지요.

○**이태규 의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이런 것 고치는 게 저는 적폐 청산이고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의 직접적인 업무라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태규 의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썄, 뭔가 좀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국회이건 청와대이건 그러면 더 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저는 오늘 총리로부터 문재인 정

부하에 이낙연 내각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런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고임금, 정규직,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헬 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일자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청와대의 만기친람에 내각은 곁돌고 있습니다. 이 정권 실세들이 살고 있는 강남이 자고 나면 ‘억억’대는 아파트값에 신명을 올릴 때 서민들은 가게 문 닫고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니 기다려 보라가 아니라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광화문에 모였던 수만 명의 절규를 들어 보십시오. 경찰의 정보보고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몸으로 가슴으로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예정되었던 대정부질문 일정을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10월 1일, 2일 및 4일로 각각 순연하였습니다.

의원님과 정부 측에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맞닥뜨려서 수사를 하는 경찰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의 잘못을 저지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즉 검찰은 현장에서 한발 떨어져서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또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경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합니다. 그것이 수사지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와 같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마치 경찰과 같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검찰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전면적,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모든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달리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때 어디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제받지 않고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 정치권력이 이러한 검찰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권한을 분산시켜서 어떤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뿐 전면에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남용도 없고 정치권력도 검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인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도 않고 특수부장이 누가 되는지를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을 보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때는 정치권력이 검찰 한 기관에만 압력을 행사하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용됩니다. 직권남용에 이르는 부당한 지시나 혹은 승진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권이

사건에 개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기관에 모두 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 사이에 견제도 작용합니다. 때문에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안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청법 개정 등 입법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 서로 합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랜 분쟁이 있었던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서 행안부장관님과 법무부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크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입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은 언제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가능한 한 지금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안별로 합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내기는 하겠지만 법안으로까지 조문화해서 내는 것은 국회 내의 사개특위가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스럽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태섭 의원**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낼 때는 헌법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법에 정한 절차고 그래야만 여야 사이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거는 총리님과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

피 지금 사개특위가 너무 중대한 과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형사 사법체계 전체를 손을 보실 때 아마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오랜 숙원인 검정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첫 단추를 제출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 정부에서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던 소위 특별수사권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그대로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조정안에 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 지금 검찰이 강하게 반발해서 이 논의가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보다는 이렇게 가능한 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선에서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마는 이 논의 자체가 단순히 경찰의 입장을 더 들었다 검찰의 입장을 더 들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워낙 우리 사회에 오래된 하나의 세력 간 힘 겨루기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회적인 논의를 국회에서 제대로 한 번 벌여 주셨으면, 아니면 논의 자체도 시작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권력기관의 개혁은 권한 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단순히 기관간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눠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계속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 도시에서 쿼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집회가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쿼어문화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도록 때로 경찰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국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소신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시위할 수 있는 또 집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또 각별히 경찰이 그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약속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당시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했던 분들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을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개입하는 점에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검찰의 역할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금태섭 의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검찰의 권한이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금태섭 의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의하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일부 축소했지만 반면 가장 문제가 되는 특수

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직접수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경합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검찰 개혁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과 2017년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 검찰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탄받는 여러 사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제도가 만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법제화 돼서 있었다고 가정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수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열거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번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수사기관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왜곡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의 권한 여부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 수사를 검찰이 담당했느냐 경찰이 담당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 이 기관을 견제하는 다른 기관이 있으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검찰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하면 검찰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검찰이 직접수사 할 때는 견제를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에서 검사한 사람한테만 압력을 넣거나 혹은 승진을 미끼로 유혹을 하게 되면 그 검사 한 명이 수사, 기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고 견해를 묻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와 재판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한 것은 현실적인 고려에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태섭 의원** 그래도 어쨌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한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송치전 수사지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권한이 약화됐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진 모르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그러한 수사가 독점적 수사가 아니라 경찰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부패 범죄, 공직사범에 대한 사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적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금태섭 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조정됐느냐를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앞으로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그 경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고려에서 일부분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것이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수사 범위를 점차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 축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특수통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특수통 검사의 주요 보직 장악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어 왔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특수 부서를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없애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검의 인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수사 소요

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러한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러한 수사가 종결이 되면 다 복귀를 해서 원래의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의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믿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이미 1년이 넘었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와 다름없이 매년 중앙지검 검사수가 늘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형사4부가 새로 신설되기까지 한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간의 싸움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에 맞고 그래야 여야 사이에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견해를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묻지는 않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실 텐데 여야 간에, 사깨트 위나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된 안건으로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조문 형식을 갖춘 정부의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예 정부 개정안을 내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부 내에서 성의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공수처에 대한 정부안 같은 경우에도 법안이 아니고 법안 형태로 의견이 나오는데 여당 내에서는 그게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의제로 취급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 쪽 의견은 법안으로 내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그리고 제가 관계 장관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 축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검찰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는 것, 때로는 비판의 대상도 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총리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시대적 과제이자 또 문제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라 견제와 불신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 조직의 힘을 유지시킨 채 좋은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자칫 무모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리고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확히 들어맞는 대책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이자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금태섭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원마산회원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한홍 의원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육박했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그런데 이제 한 40%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또 적잖은 분들은 오히려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보고요. 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취임 초기의 기대에 덜 충분하다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 아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탈원전 광풍에 지난여름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들 또 코드에 맞는 사람 중용한다는 그런 코드인사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지방 부동산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은 결국은 더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 너무나 많이 보여 줍니다.

또 일자리 참사, 분배 참사, 부동산 참사 또 국민을 몰래 속이고 북한 석탄을 들여와서 우리 전기를 생산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알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실체를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총리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것이 꽤 있습니다만, 탈원전 때문에 여름에 고생했다든가 북한산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윤한홍 의원 남동발전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한 것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일 없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남동발전에서 북한산 석탄을 9700t 수입했습니다. 이미 관세청 수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언제든지 책임지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은 전원 교체를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청와대 수석이나 내각이나 지금 이미 부분적인 개편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 부분적인 개편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대통령이나 또는 저나 어떤 것이 더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는 길인가, 신뢰를 얻는 길인가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윤한홍 의원 오늘 부동산정책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사전에 보고는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난 주말에 같이 협의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렇지요?

이게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주로 이른바 조정지역의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중점이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은 그대로 있고요. 실수요자 보호라든가 여타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윤한홍 의원 지금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알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수년 동안 계속된 공급과잉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미분양이 많이 속출하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저도 국회의원과 지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총리님께서도 역시 전 정부 탓, 남 탓을 참 잘하시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국회

의원과 지방 지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저도 지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은 좀 살려 주는 정책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지방의 경제를 어떻게 재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고민해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윤한홍 의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는 오직 서울만 관심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다 죽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지역 출신들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들께 드리는 절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 것이지 그것을 키우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윤한홍 의원** 오전에 총리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동산이 많이 오른 것이 박근혜정부 금리인하 탓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봤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탓만이 아니라 그것도 작용했다는 것은 뭐 사실 아닙니까?

○**윤한홍 의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은 총재는 그대로……

○**윤한홍 의원** 몇 번 하셨지요? 금융통화위원회 분기별로 한 번 안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금리 당장 올리셔야지요, 그러시면. 왜 지금까지 남 탓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을 테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단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한미 간의 금리역전이라든가 또는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 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쪽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윤한홍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중요한 본회의장에서 ‘서울 부동산이 오르는 데 박근혜정부 금리인하 탓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데 대해서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그 당시에 작용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 탓이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이 들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한홍 의원**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한홍 의원** 말장난하지 마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 금통위에서 금리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금리를 못 한다, 못 올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지요, 그 틀에서 지금도 그 틀을 유지해 온 편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한홍 의원**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은 전세금 대출이 힘들어질 겁니다. 또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 점입니다. 가계 부담이나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래서 이런 답변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본적으로 금통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윤한홍 의원**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또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되겠지요.

○**윤한홍 의원**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 청년의 희망을 짓밟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참 공감아 옵니다. 그런데 청년의 희망을 짓밟는 인사가 있습니다.

인베스트코리아라고 알고 계시지요? KOTRA 산하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거기에 이번에 사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손녀사위가 선임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습니다.

모르시나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처음 들었습니다.

○윤한홍 의원 보고 못 받으셨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사흘 동안 외국에 있다가 어젯밤에 들어왔습니다.

○윤한홍 의원 저는 전형적인 특혜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면접관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은 점수를 준 것이 하위 점수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 특출하게 많은 점수를 줘 가지고 서류심사에서 2등을 해서 올라가 가지고 면접점수 잘 받아서 채용이 됐습니다. 나이가 42세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연봉이 성과급 포함해서 2억 4000까지 갑니다.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과 상충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 정도 문제 삼으신 만큼 적절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한홍 의원 모르면 답변을 안 하시고 피해 가시는군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사실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의원 헤드테이블에 앉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거기 만찬장 6번 테이블에 이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누군지 모릅니다.

○윤한홍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손녀사위, 42세 장상현 씨, 이번에 인베스트코리아 사장에 임명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전직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지요?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윤한홍 의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학지원팀 차장입니다. 이분이 그 국민만찬장 테이블에, 장관이 앉아 있고 야당 원내대표가 앉아 있고 민간 그룹 회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인베스트코리아 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금수저 대물림입니다.

이런 공기업 인사를 두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

씀하실 수 있나요? 모른다고 하면 그뿐입니까? 정확하게 수사를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한홍 의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것에 관여된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한홍 의원 좀 조사를 하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에 많은 젊은이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한홍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이번에 전남지사 되셨지요? 전 농림부장관 하신 김영록 장관님, 문무일 검찰총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어디 공통점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아시지요? 모두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광주서중 출신입니다.

광주서중은 광주일고 전신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중·고등학교가 하나였을 때 그렇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렇지요, 옛날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의 한 개 고등학교가 동시에 대한민국 총리, 부총리, 청와대, 검찰, 육군 등 요직을 다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누가 그것을 작심해서 그렇게 일부러 기획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한홍 의원 총리께서 2013년 의원 시절에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4대 권력기관장에 호남 출신 한 명도 없다’, 인터뷰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윤한홍 의원 ‘호남 소외가 MB 정부보다 심하다’, 인터뷰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4대 권력기관장에 영남 출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깊게 무슨 지역을 의식해서 따져 보거나 그런 것을 최근에 못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 경찰청장, 국세청은 차장까지 전부 호남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 청와대의 핵심 직위가 이렇게 호남 출신으로만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매번 그랬다면 더 큰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드문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윤한홍 의원 참 말씀……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지난 수년 동안, 10년 가까운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한홍 의원 덧붙이겠습니다.

비서실장 임종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하성 정책실장 또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 청와대도 모두 호남 출신이 다 잡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수석급은 영남이 훨씬 많습니다.

○윤한홍 의원 사법 분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부 요직 14명 교체했습니다. 대구·경북 출신은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이렇게 지역 안배를 안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법원장님은 어디신가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다음에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계시지요? 이분도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총리님께서 그 당시에 언론에 인터뷰했던 내용과 비춰 보면 영남 소외가 뭐 거의 응징 수준이지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군도 한번 봅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모두 호남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호남공화국이라고 불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기획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윤한홍 의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

정말 적폐 적폐 하는 문재인 정부,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코드인사·편향인사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총리님도 이런 적폐 인사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께서 2013년과 2017년, 두 번 그림 전시회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그 당시에 총리님 이름이 들어가서 초청장이 나갔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설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꽤 있습니다. 당시 전남개발공사에서도 그림을 두 점을 사셨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한홍 의원 그리고 전시회 하시는 분이 도지사 부인이라는 기사도 사전에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호당 10만 원인가 매우 싸값에 나왔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런데 보통……

○국무총리 이낙연 몇 점 안 팔았습니다.

○윤한홍 의원 몇 점 안 파셨습니까? 그것 공개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때 설명을 드릴 만큼 드렸고요 그 뒤로는 일절 전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자체가 공직자로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사례 깊이 못한 행동을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직권남용이나 김영관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이낙연 그때는 김영관법 시행 전입니다.

○윤한홍 의원 그러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씨,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한홍 의원 박근혜정부 때 열심히 일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인사는 제가 관여할 대상이 아닙니다.

○윤한홍 의원 지금 왜 2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합니까? 청와대 감찰은 필요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제가 관여할 대상이 아닙니다.

○**윤한홍 의원**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지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벌써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그래도 이번에 수익 오르셨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고요, 전용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윤한홍 의원**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질의해」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대정부질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질의를 야비하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윤한홍 의원** 좀 앉아요.

조용히 하세요.

(「얹실하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한홍 의원** ‘강남에 살아 봐서 아는데 집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부동산정책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강남에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국토부장관은 자기 집도 별로 안 가져 본 사람이고 서울에 집이 없을 겁니다.

○**윤한홍 의원**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도 유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4대강 사업비 22조 원 가지고 일 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54조 원 들여서 일자리 3000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정부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윤한홍 의원** 자영업자 570만 세무조사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1년에 세무조사 받는 사람 13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570만 면제해 주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걸 뛰어넘는 보완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윤한홍 의원** 정말 말로써 하는 장난이 과도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지나칩니다. 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불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옳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불의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이 불의입니다.

○**윤한홍 의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아픈 마음 선부른 말로 굽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특히 언동에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 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윤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 의원(283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광수 김동철 김민기 김부겸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승희 김용태 김정재 김종민 김진표 김학용 김현권 노웅래 민경욱 박광온 박명재 박성중 박완주 박정원 백재현 서영교 성일종 송갑석 송영길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엄용수 오신환 우원식 유기준 유승민 윤관석 윤영석 윤종필 윤후덕 이만희 이상헌 이원욱 이장우
 김경협 김규환 김두관 김병관 김삼화 김선동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정호 김종석 김철민 김한정 김현아 맹성규 민병두 박대출 박범계 박순자 박용진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청원 소병훈 송기현 송옥주 신상진 심재권 안상수 여영호 원유동 유승희 윤상직 윤영일 윤준호 이균현 이명수 이완영 이은재
 김관영 김기선 김명연 김병기 김상훈 김성수 김성태 김수민 김영진 김재원 김정훈 김종회 김태년 김한표 나경원 문진국 문홍철 박덕흠 박병석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변재일 서형수 손금주 송석준 신경민 심기준 안규백 어기구 오세정 우상호 위성곤 유재중 윤소하 윤재옥 윤호중 이동섭 이상민 이양수 이영호 이인영 이정미
 김광림 김도읍 김무성 김병욱 김상희 김성식 金成泰 김순례 김영호 김정우 김중대 김중로 김태흠 김해영 남인순 문희상 박경미 박맹우 박선숙 박재호 박주현 백승주 서삼석 설훈원 송언석 신경민 안기구 오상호 위성곤 유재중 윤소하 윤재옥 윤호중 이동섭 이상민 이양수 이영호 이인영 이정미

이종걸 이주영 이철규 이학영 이현재 인재근 장석춘 전해철 정갑윤 정세균 정운천 정진석 조경태 조응천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최재성 표창원 함진규 홍의락 황영철
 이종구 이진복 이철희 이재훈 임이자 장정숙 전현희 정동영 정양석 정유섭 정춘숙 조배숙 조정식 주호영 천정배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홍문종 홍익표 황주홍
 이종명 이찬열 이춘석 이해찬 이후삼 임종성 장제원 전혜숙 정병국 정용기 정인화 정태옥 조승래 조훈현 진선미 최경환(평) 최운열 추미애 한선교 홍일표 황희
 이종배 이채익 이태규 이현승 이훈장 병완전 재수경 정성호 정우택 정종섭 체윤경 조원진 주광덕 진영최 교일최 인호추혜선한정애홍영철홍철호

○개의 시 재석 의원(130인)

강훈식 권은희 김도읍 김부겸 김성수 김승희 김정재 김태년 맹성규 박경미 박영선 박찬대 변재일 설훈원 송갑석 신동근 안규백 우상호 유성엽 윤재옥 윤호중 이동섭 이상민 이양수 이영호 이인영 이정미
 고용진 기동민 김두관 김상훈 김성찬 김영진 김정호 김한정 문진국 박대출 박완수 박홍근 서삼석 성일종 송기현 신용현 안호영 위성곤 유영일 윤준호 이은권
 광상도 김광림 김병관 김석기 김성태 김영호 김종회 김한표 문희상 박선숙 박주민 백재현 서영교 소병훈 송언석 심기준 어기구 유동수 윤영일 윤준호 이은권
 권미혁 김규환 김병욱 김선동 김순례 김용태 김중로 김현권 민홍철 박성중 박주현 백혜련 서형수 손혜원 송옥주 심상정 엄동열 유민봉 윤일규 한홍섭 이장우

이 정 미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용 기	정 윤 천	정 종 섭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윤 열	최 재 성
표 창 원	홍 영 표		

○속개 시 재석 의원(72인)

강 효 상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철 승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석 기	김 성 수	김 성 원	김 세 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정 우	김 중 로
김 태 흙	김 학 용	김 현 권	노 웅 래
문 진 국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주 선	박 홍 근	백 혜 린
서 삼 석	서 형 수	소 병 훈	안 상 수
어 기 구	염 동 열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규 희
이 동 섭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현
이 원 옥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정 현
이 종 명	이 주 영	이 철 규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혜 훈	임 이 자	장 석 춘
정 갑 윤	정 성 호	조 훈 현	주 호 영
최 윤 열	추 경 호	홍 영 표	홍 철 호

○산회 시 재석 의원(92인)

강 길 부	강 효 상	곽 대 훈	곽 상 도
금 태 섭	김 광 립	김 광 수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옥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석 기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희	김 학 용	문 진 국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서 영 교
손 혜 원	송 옥 주	송 회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심 재 권	안 상 수	염 동 열
오 신 환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규 희	이 동 섭	이 양 수	이 용 주
이 원 옥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정 현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현 승	이 혜 훈	임 이 자
임 중 성	전 재 수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윤 천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조 승 래
최 교 일	최 도 자	함 진 규	홍 영 표

○청가 의원(11인)

김 경 진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종 훈
김 진 태	도 종 환	신 보 라	이 개 호
이 용 득	정 재 호	지 상 옥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사 무 차 장	김 수 홍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겸

○출석 정부위원

법 무 부 차 관	김 오 수
-----------	-------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주영

9월 13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8. 9. 13.)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9. 10.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9. 12.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윤후덕 강훈식 전재수 임종성 소병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2018. 9. 6.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상훈 민경욱 송석준 이만희 최교일	자유한국당	2018. 9. 6.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경진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전해철 신동근 이재정 김영호 맹성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2018. 9. 7.
	권성동 이채익 곽상도 윤한홍 정종섭	자유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심상정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교육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2018. 9. 7.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2018. 9. 10.
	김상훈	자유한국당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018. 9. 12.
	이채익	자유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윤호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2018. 9. 10.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신보라 · 김중석 · 김태흠 · 이진복 · 김성찬 · 이종명 · 임이자 · 정유섭 · 이철규 · 김승희 · 이개호 · 정운천 · 이장우 · 윤상현 · 문진국 · 김용태 · 이은재 · 정춘숙 · 천정배 · 이명수 · 김광수 · 나경원 · 장정숙 · 이양수 · 박순자 · 홍영표 · 안상수 · 서형수 · 송희경 · 김경진 · 조훈현 · 황주홍 · 송석준 · 김삼화 ·

이주영 · 김관영 · 최교일 · 김재경 · 김정재 · 홍철호 · 채이배 · 송옥주 · 심재철 · 임종성 · 윤후덕 · 정태욱 · 김수민 · 김성원 · 남인순 · 전해숙 · 김학용 · 윤영석 · 염동열 · 金成泰 · 백재현 · 심재권 · 이찬열 · 신용현 · 정갑윤 · 홍일표 · 함진규 · 이종배 · 이태규 · 성일중 · 설훈 · 김성태 의원 발의)

9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나경원 · 송희경 · 김삼화 · 윤종필 · 김현아 · 신보라 · 김승희 · 신용현 · 김수민 · 김정재 · 이은재 · 남인순 · 조배숙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김수민 · 이학재 · 이동섭 · 신보라 · 이찬열 · 김삼화 · 이연주 · 송희경 · 김경진 · 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주광덕 · 곽상도 · 박명재 · 정갑윤 · 김성찬 · 권성동 · 성일중 · 김성원 · 신보라 · 정유섭 · 김학용 의원 발의)

9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강병원 · 정성호 · 오제세 · 정춘숙 · 백혜련 · 이원욱 · 윤후덕 · 정재호 · 김병욱 · 김해영 · 권칠승 의원 발의)

9월 7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정갑윤 · 김석기 · 추경호 · 성일중 · 이종명 · 송희경 · 권성동 · 조경태 · 김규환 · 염동열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조정식 · 김정우 · 김철민 · 윤영일 · 안호영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금태섭 · 정춘숙 · 이용호 · 윤일규 · 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서영교·서삼석·조승래·신창현·
김상희·김병기·송옥주·심재권·김영호·
박찬대·윤후덕·이후삼·김철민·최재성·
심기준·전현희·원혜영·강훈식·송기현·
강병원·박정·박광온·박범계·노웅래 의원
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정병국·김세연·송희경·원유철·
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
홍문표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권칠승·신경민·박광온·김해영·
조정식·이춘석·이원욱·고용진·이수혁·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이찬열·황주홍·김수민·조경태·
권칠승·이동섭·김철민·오제세·이언주·
김종회·김삼화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신보라·홍일표·윤종필·박덕흠·
박명재·최연혜·김수민·송희경·김승희·
함진규·강석호·이은권·김영우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김삼화·이동섭·김동철·김관영·
정병국·이언주·권은희·김중로·이찬열·
정운천·박주선·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이완영·김승희·손금주·황주홍·
주광덕·김명연·유민봉·송언석·김태흠·
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 의원 발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이완영·주광덕·김명연·송언석·
김태흠·곽대훈·강석진·어기구·김광림·
이은권·박맹우 의원 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박주현·장병완·박선숙·윤영일·
황주홍·김광수·윤소하·김종회·장정숙·
천정배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박주현·장병완·박선숙·윤영일·
황주홍·김광수·윤소하·김종회·장정숙·
천정배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김삼화·이동섭·이태규·김동철·
김관영·정병국·이언주·권은희·이찬열·
김중로·박주선·하태경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이언주·정병국·하태경·오제세·
이동섭·이찬열·주승용·김삼화·김종회·
김수민·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회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
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
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함진규·박덕흠·김종석·신보라·
정유섭·김학용·김성원·주광덕·송희경·
임이자·문진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송옥주·김경협·김동철·민병두·
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이상현·
전혜숙·정춘숙 의원 발의)

9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김경협·권칠승·이수혁·안호영·
전현희·정재호·조승래·송갑석·이훈·

송옥주 · 김병기 · 김상희 · 최인호 · 서삼석 · 김영호 · 신창현 · 위성곤 · 제윤경 · 강병원 · 심기준 · 김한정 · 심재권 · 민병두 · 노웅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강병원 · 오제세 · 정춘숙 · 백혜련 · 이원욱 · 윤후덕 · 정재호 · 김병욱 · 김해영 · 권칠승 · 정성호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8. 9. 6. 김경협 · 권칠승 · 안호영 · 전현희 · 정재호 · 조승래 · 이수혁 · 이훈 · 송옥주 · 김병기 · 최인호 · 김영호 · 송갑석 · 위성곤 · 강병원 · 김한정 · 심재권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서영교 · 서삼석 · 조승래 · 신창현 · 김상희 · 김병기 · 송옥주 · 심재권 · 김영호 · 박찬대 · 윤후덕 · 이후삼 · 김철민 · 최재성 · 심기준 · 전현희 · 원혜영 · 강훈식 · 송기현 · 강병원 · 박정 · 박광온 · 박범계 · 노웅래 의원 발의)

9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이상 2건 2018. 9. 6. 의장 제의)

이상 2건 9월 6일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 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9. 6. 박용진 · 소병훈 · 정춘숙 · 이규희 · 송옥주 · 위성곤 · 김성수 · 김영진 · 김성환 · 박찬대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백혜련 · 이재정 · 김병기 · 박찬대 · 윤혜영 · 김정우 · 강창일 · 추미애 · 김성수 · 송기현 의원 발의)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김병기 · 이원욱 · 정재호 · 신창현 · 표창원 · 이철희 · 윤호중 · 조정식 · 백혜련 ·

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경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김정우 · 이석현 · 이춘석 · 김영진 · 신창현 · 강병원 · 김두관 · 김해영 · 이종걸 · 이용호 · 이개호 · 이원욱 · 윤관석 · 원혜영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이태규 · 이동섭 · 박주선 · 최도자 · 신용현 · 장정숙 · 김삼화 · 이언주 · 이찬열 · 김수민 · 오신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오제세 · 이상돈 · 이찬열 · 정태욱 · 정춘숙 · 강병원 · 이언주 · 강길부 · 전해숙 · 권칠승 · 노웅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조정식 · 김정우 · 김철민 · 윤영일 · 안호영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금태섭 · 이용호 · 윤일규 · 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김성수 · 손금주 · 박영선 · 이춘석 · 우원식 · 임종성 · 박재호 · 신용현 · 최인호 · 김중훈 · 김경진 · 박정 · 홍의락 · 변재일 · 백재현 · 한정애 의원 발의)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이언주 ·

김중회 · 김삼화 의원 발의)

9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김정우 · 김경협 · 김병기 · 김진표 ·
박홍근 · 송옥주 · 신창현 · 안규백 · 유동수 ·
원혜영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유민봉 · 이채익 · 윤재옥 · 송희경 ·
이철규 · 김상훈 · 정태옥 · 성일종 · 박성중 ·
이명수 · 김규환 · 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임이자 · 정유섭 · 문진국 · 정갑윤 ·
김성원 · 장석춘 · 김성찬 · 원유철 · 염동열 ·
홍문종 의원 발의)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황주홍 · 임이자 · 이찬열 · 이언주 ·
김중로 · 정동영 · 김광수 · 김중회 · 원유철 ·
정인화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경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유민봉 · 이채익 · 이철규 · 정태옥 ·
성일종 · 정유섭 · 최연혜 · 김규환 · 박성중 ·
이은권 의원 발의)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윤상직 · 이언주 · 추경호 · 정유섭 ·
김종석 · 박대출 · 윤한홍 · 김규환 · 권성동 ·
정종섭 의원 발의)

9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박순자 · 이현재 · 함진규 · 이은권 ·

맹성규 · 송석준 · 홍철호 · 홍문종 · 윤관석 ·
이완영 · 안호영 · 임종성 · 김철민 · 김정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윤관석 · 안호영 · 김철민 · 황희 ·
권칠승 · 박순자 · 이후삼 · 임종성 · 정유섭 ·
김정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박순자 · 정유섭 · 이현재 · 신상진 ·
이은권 · 함진규 · 윤관석 · 박완수 · 송석준 ·
홍문종 · 손금주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이혜훈 · 정병국 · 김삼화 · 박성중 ·
이상돈 · 광대훈 · 이학재 · 김석기 · 박인숙 ·
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9. 7. 김재경 · 조훈현 · 이채익 · 박명재 ·
정병국 · 이철규 · 정운천 · 홍문표 · 송언석 ·
김석기 · 홍철호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추경호 · 김석기 · 정병국 · 강석호 ·
주광덕 · 김광림 · 엄용수 · 김용태 · 정진석 ·
박명재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추경호 · 김석기 · 정병국 · 강석호 ·
주광덕 · 김광림 · 엄용수 · 김용태 · 정진석 ·
박명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김영호 · 금태섭 · 조정식 · 천정배 ·
원혜영 · 송옥주 · 김혜영 · 박영선 · 위성곤 ·
윤후덕 · 김병기 · 제윤경 · 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명수 · 김성찬 · 박맹우 · 함진규 ·
유민봉 · 이현승 · 이만희 · 이은권 · 성일종 ·
김용태 의원 발의)

9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추경호 · 김석기 · 정병국 · 강석호 · 주광덕 · 김광림 · 엄용수 · 김용태 · 정진석 · 박명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오제세 · 이상돈 · 이찬열 · 정태욱 · 정춘숙 · 강병원 · 이언주 · 강길부 · 전해숙 · 권칠승 · 노응래 · 백재현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찬열 · 황주홍 · 위성곤 · 김광수 · 권칠승 · 유성엽 · 유동수 · 윤후덕 · 김삼화 · 김철민 · 김동철 · 하태경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김정우 · 서형수 · 김철민 · 백재현 · 김병기 · 윤관석 · 이상헌 · 김상희 · 원혜영 · 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박경미 · 백혜련 · 이찬열 · 윤일규 · 기동민 · 손금주 · 서영교 · 김병기 · 박찬대 · 송옥주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김영호 · 박정 · 송옥주 · 김해영 · 박영선 · 위성곤 · 윤후덕 · 김병기 · 제윤경 · 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추경호 · 김석기 · 정병국 · 강석호 · 주광덕 · 김광림 · 엄용수 · 김용태 · 정진석 · 박명재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이명수 · 김성찬 · 박맹우 · 함진규 · 유민봉 · 이현승 · 이만희 · 이은권 · 성일중 · 김용태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명수 · 김성찬 · 박맹우 · 함진규 · 유민봉 · 이현승 · 이만희 · 이은권 · 성일중 · 김용태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김영호 · 김철민 · 유동수 · 금태섭 · 소병훈 · 송옥주 · 김해영 · 박영선 · 위성곤 · 윤후덕 · 이훈 · 김병기 · 제윤경 · 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김병욱 · 김해영 · 김경협 · 강훈식 · 변재일 · 이찬열 · 권칠승 · 윤후덕 · 강병원 · 안호영 · 고용진 · 김병관 · 박정 · 박찬대 · 오영훈 · 추혜선 의원 발의)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황주홍 · 임이자 · 이찬열 · 이언주 · 김중로 · 정동영 · 김광수 · 김종희 · 원유철 · 정인화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윤준호 · 최인호 · 김해영 · 전재수 · 박재호 · 박완주 · 김영춘 · 신창현 · 김종민 · 김민기 · 김병관 · 서삼석 · 전현희 · 박광온 · 유동수 · 윤후덕 · 전해철 · 정재호 · 박영선 · 이훈 · 김영호 · 맹성규 · 조승래 · 윤일규 · 이용득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경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2018. 9. 10. 주승용 · 김동철 · 이동섭 · 이언주 · 김중로 · 김관영 · 최도자 · 김수민 · 신용현 · 하태경 · 채이배 · 김삼화 · 박주선 · 박선숙 · 정병국 · 권은희 · 이찬열 · 이학재 · 원혜영 · 전해숙 · 서영교 · 송옥주 · 권칠승 · 조승래 · 김영호 · 전재수 · 조정식 · 오영훈 · 김정우 · 강창일 · 김병기 · 정춘숙 · 박정 · 김용태 · 김선동 · 홍문종 · 황영철 · 조정태 · 한선교 · 김정훈 · 이종명 · 김종석 · 추경호 · 박덕흠 · 이주영 · 문진국 · 임이자 · 송희경 · 성일종 · 곽상도 · 김승희 · 이명수 · 함진규 · 윤재옥 · 주광덕 · 김성원 · 신보라 · 정유섭 · 김학용 · 이장우 · 홍문표 의원 발의)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김기선 · 홍일표 · 윤영석 · 유재중 · 곽대훈 · 김석기 · 이채익 · 권성동 · 함진규 · 추경호 의원 발의)

9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원유철 · 박맹우 · 김순례 · 임이자 · 박덕흠 · 정태욱 · 金成泰 · 강석진 · 김영우 · 김성찬 · 김한표 의원 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8. 9. 10. 이현승 · 김도읍 · 유기준 · 나경원 · 김석기 · 이양수 · 지상욱 · 엄용수 · 김광림 · 이명수 · 이만희 · 윤한홍 · 전희경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0. 이현승 · 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나경원 · 김석기 · 이양수 · 지상욱 · 엄용수 · 김광림 · 이명수 · 이만희 · 윤한홍 · 전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황주홍 · 김광수 · 박주현 · 이찬열 · 이언주 · 김종희 · 신용현 · 김중로 · 장정숙 · 최도자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황주홍 · 김광수 · 박주현 · 이찬열 · 이언주 · 김종희 · 신용현 · 김중로 · 장정숙 ·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고용진 · 김병욱 · 이수혁 · 윤관석 · 유동수 · 추혜선 · 한정애 · 기동민 · 채윤경 · 민병두 의원 발의)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고용진 · 김병욱 · 금태섭 · 정재호 · 채윤경 · 박홍근 · 권칠승 · 기동민 · 윤준호 · 김종민 · 남인순 · 한정애 · 이원욱 · 이훈 · 노웅래 의원 발의)

9월 12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1.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정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추경호 · 김용태 · 이종명 · 신보라 · 김선동 · 김기선 · 이종배 · 이채익 · 박명재 · 김상훈 · 김광림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1.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이정미 · 김종대 · 김종훈 · 김영호 · 박주현 · 정동영 · 천정배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이찬열 · 황주홍 · 권칠승 · 신용현 · 김삼화 · 이동섭 · 김철민 · 김동철 · 김광수 · 오제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1. 오제세 · 이상돈 · 이찬열 · 정태욱 · 정춘숙 · 강병원 · 이언주 · 전해숙 · 권칠승 · 노웅래 · 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변재일 · 진선미 · 이철희 · 김병욱 ·

이원욱 · 이학영 · 이석현 · 윤호중 · 김성수 · 오제세 · 전해숙 의원 발의)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2018. 9. 11. 정부 제출)

9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황영철 · 김진태 · 홍철호 · 박성중 · 김용태 · 박덕흠 · 권성동 · 이종명 · 김기선 · 이철규 · 정대수 · 이양수 · 정태욱 의원 발의)

9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손금주 · 김성수 · 최경환(평) · 김수민 · 최도자 · 정인화 · 김종희 · 박선숙 · 장정숙 · 김광수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임종성 · 김민기 · 조승래 · 김병관 · 송갑석 · 안호영 · 박홍근 · 변재일 · 조정식 · 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심재철 · 정진석 · 이종명 · 박인숙 · 유기준 · 신상진 · 박성중 · 김진태 · 김재경 · 정태욱 의원 발의)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김광수 · 이상돈 · 김경진 · 이용호 · 김종희 · 이찬열 · 황주홍 · 윤소하 · 장정숙 · 조배숙 의원 발의)

9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송언석 · 김석기 · 박인숙 · 김정재 ·

김광림 · 권성동 · 곽대훈 · 주호영 · 김선동 · 추경호 · 성일종 의원 발의)

9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변재일 · 진선미 · 이철희 · 김병욱 · 이원욱 · 이학영 · 윤호중 · 김성수 · 오제세 · 전해숙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김광수 · 이상돈 · 김경진 · 이용호 · 김종희 · 이찬열 · 황주홍 · 윤소하 · 장정숙 · 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고용진 · 김병욱 · 이수혁 · 윤관석 · 안민석 · 유동수 · 박경미 · 추혜선 · 한정애 · 기동민 의원 발의)

9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고용진 · 김병욱 · 이수혁 · 윤관석 · 안민석 · 유동수 · 박경미 · 추혜선 · 한정애 · 기동민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임이자 · 김성원 · 장석춘 · 원유철 · 윤종필 · 문진국 · 김성찬 · 함진규 · 정갑윤 · 윤영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송언석 · 김석기 · 박인숙 · 김정재 · 김광림 · 권성동 · 곽대훈 · 주호영 · 김선동 · 추경호 · 성일종 · 송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용태 · 김재경 · 김선동 · 정유섭 · 박명재 · 추경호 · 이은권 · 이종명 · 정태옥 · 김광림 · 김종석 · 이명수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용태 · 김선동 · 정유섭 · 박명재 · 추경호 · 이은권 · 이종명 · 홍문표 · 정태옥 · 이명수 · 김광림 · 김종석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정춘숙 · 오제세 · 이상현 · 민홍철 · 박주현 · 김병기 · 송옥주 · 김정우 · 임종성 · 이규희 · 김성수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민병두 · 강병원 · 고용진 · 김경협 · 김병관 · 김병욱 · 송옥주 · 이학영 · 전재수 · 정재호 · 홍익표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추경호 · 김용태 · 이종명 · 김선동 · 김기선 · 이종배 · 이채익 · 박명재 · 김상훈 · 김광림 · 이철규 · 박덕흠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윤종필 · 심재철 · 박덕흠 · 김성찬 · 원유철 · 신보라 · 임이자 · 김중로 · 정태옥 · 성일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오제세 · 이상돈 · 이찬열 · 정태옥 · 정춘숙 · 강병원 · 이언주 · 전해숙 · 권칠승 · 노웅래 · 백재현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신용현 · 오신환 · 최도자 · 오세정 · 김철민 · 김중로 · 장병완 · 황주홍 · 조배숙 · 김성수 · 김동철 · 김병욱 · 황희 · 이동섭 · 이찬열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재경 · 김규환 · 이종명 · 김재원 · 유기준 · 정갑윤 · 권성동 · 김선동 · 김용태 ·

김성원 · 김석기 · 송희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강효상 · 윤상직 · 김종석 · 정유섭 · 이언주 · 신보라 · 최교일 · 백승주 · 이만희 · 김광림 · 송언석 · 조훈현 · 문진국 · 이장우 · 김진태 · 金成泰 · 윤종필 · 최연혜 · 김학용 · 박완수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박병석 · 고용진 · 소병훈 · 조승래 · 박찬대 · 김정우 · 김병기 · 추미애 · 손혜원 · 유동수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신용현 · 김성수 · 조배숙 · 장병완 · 김동철 · 김병욱 · 황희 · 이동섭 · 김철민 · 김현아 · 이찬열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이종명 · 김성찬 · 황영철 · 박명재 · 김승희 · 신보라 · 유민봉 · 이완영 · 김규환 · 심재철 · 추경호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경진 · 원유철 · 김광수 · 주광덕 ·
장병완 · 김중로 · 김중회 · 유동수 · 윤종필 ·
조경태 · 박덕흠 · 이규희 · 김삼화 · 장정숙 ·
박주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2. 김경진 · 원유철 · 송옥주 · 김광수 ·
주광덕 · 장병완 · 김중로 · 김중회 · 유동수 ·
윤종필 · 조경태 · 박덕흠 · 이규희 · 김삼화 ·
장정숙 · 고용진 · 이찬열 · 박주현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이종명 · 김성찬 · 황영철 · 박명재 ·
김승희 · 신보라 · 유민봉 · 이완영 · 김규환 ·
심재철 · 추경호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채이배 · 권미혁 · 이찬열 · 권은희 ·
김삼화 · 이태규 · 김관영 · 김동철 · 오신환 ·
박선숙 · 김수민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채이배 · 권미혁 · 이찬열 · 권은희 ·

김삼화 · 이태규 · 김관영 · 김동철 · 오신환 ·
박선숙 · 김수민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채이배 · 권미혁 · 이찬열 · 권은희 ·
김삼화 · 이태규 · 김관영 · 김동철 · 오신환 ·
박선숙 · 김수민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채이배 · 권미혁 · 이찬열 · 권은희 ·
김삼화 · 이태규 · 김관영 · 김동철 · 오신환 ·
박선숙 · 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3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송갑석 · 신경민 · 정재호 · 이훈 ·
박정 · 안규백 · 김병관 · 권철승 · 박홍근 ·
박광온 · 이수혁 · 심재권 의원 발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송갑석 · 신경민 · 정재호 · 이훈 ·
박정 · 안규백 · 김병관 · 권철승 · 박홍근 ·
박광온 · 이수혁 · 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2019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국산 상용SW 구매실적(금액비율) 반영에
관한 질문서**

(2018. 9. 7. 윤영석 의원 제출)

동해안 참문어 포획 금지 체중 설정에 대한 질문서

(2018. 9. 11. 박명재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9. 10. 정부 제출)

**‘중증장애가족 활동지원 인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원격협진 활성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8. 9. 12.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8년도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보고서

(2016. 9. 11. 정부 제출)

9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상 2건 2018. 9. 12. 정부 제출)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